



#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 12

기획재정부



# 목 차

## 제 1 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 3
2.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5

## 제 2 부 | 2013~2017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11
2. 재정운용 여건 / 13

## 제 3 부 | 2013~2017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 21
2. 중기 재정전망 / 23
3.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 42
4.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47

## 제 4 부 |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노동 분야 / 57
2. 교육 분야 / 76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87
4. 환경 분야 / 100
5. R&D 분야 / 11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119

- 7. SOC 분야 / 129
- 8. 농림·수산·식품 분야 / 138
- 9. 국방 분야 / 148
- 10. 외교·통일 분야 / 155
-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164
-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180

## 제 5 부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 1. 세입기반 확충
  - 1) 비과세·감면 정비 / 191
  - 2) 지하경제 양성화 / 193
  - 3) 금융소득 과세 강화 / 195
  - 4)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196
  
- 2. 지출효율성 제고
  - 1) 재정개혁의 본격적 추진 / 200
  - 2) 세출구조조정 추진 / 202
  - 3) 조세지출-세출예산 연계·정비 / 205
  - 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207
  
- 3. 재정관리체계 개선
  - 1) 중앙-지방간 자원조정 / 209
  - 2) 국가채무관리 강화 / 212
  - 3) 공공부문 부채 산출·관리 / 215
  - 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217
  - 5)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 / 219
  - 6) 장기재정전망 실시 / 221

## 제 1 부

#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의의



#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을 말한다.

### ■ 재정운용에 중기적 시계를 적용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매년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뿐만 아니라 중장기 시계의 국가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전략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년도 위주의 예산 편성만으로는 국가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자원배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5개년도 단위의 재정계획으로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07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 전략적 자원배분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가 더욱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과 발전으로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지고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거시재정 운용의 방향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5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수입을 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세분화하고, 통합재정수지의 전망, 근거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 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와 관리계획 등을 제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보완·개선조치로 인해 재정규모 등 재정총량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2012년 12월에 계획 수립지침 통보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2012년 12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으며, 각 부처는 이에 따라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3년 1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공개토론회 개최

2013년 2월부터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5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2013년 6월 12일 복지·지방재정·교육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9개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14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분야별 분과위원회, 공개토론회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동 계획은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 ▣ 정부는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작성

- 정부는 1982년부터 재정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은 개략적인 재정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시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 ▣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 2004년부터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07년부터 법적(국가재정법)으로 제도화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정부는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5년단위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12대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 계획의 대상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

- 계획의 포괄범위도 넓어져 종래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폭 넓게 참여하도록 하여 계획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이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시하는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재정소요를 분석하고 단년도 예산의 기본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내외 재정위험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 견지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에 적자규모를 GDP 대비 Δ0.3%로 축소하고, 2014년 이후 흑자 기조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GDP 대비 30% 이내로 진입하여 2016년 28.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향상 지원

-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선진 일류 국가 건설을 재정에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

(단위 :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조원)	343.5	372.6	396.1	415.2	439.1	6.3
• 국세수입(조원)	205.8	216.4	238.9	259.1	280.4	
재정지출(조원)	325.4	342.0	357.5	373.1	389.7	4.6
관리재정수지(조원)	Δ 14.3	Δ 4.7	1.0	2.2	8.3	
(GDP 대비, %)	(Δ 1.1)	(Δ 0.3)	(0.1)	(0.1)	(0.5)	
국가채무(조원)	445.9	464.6	470.6	481.2	487.5	
(GDP 대비, %)	(33.3)	(34.3)	(31.4)	(29.9)	(28.3)	

\* '12, '13년은 국회 확정예산(본예산) 기준

▣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과 기금(64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세 등 일반 세입으로 경제개발, 복지, 교육, 국방 등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는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운영, 기타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이다.
- 기금은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특정 자금을 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비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재정의 구조

구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수	1개	18개	64개
규모	총지출 349.0조원(추경 기준)		
내용	세입	세출	기업 특별 회계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세</li> <li>▪ 관세</li> <li>▪ 교통세</li> <li>▪ 교육세</li> <li>▪ 종합부동산세</li> <li>▪ 세외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li> <li>▪ 교육</li> <li>▪ 교통및물류</li> <li>▪ 국방</li> <li>▪ 일반공공행정</li> <li>▪ 농림수산식품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곡관리</li> <li>▪ 조달</li> <li>▪ 책임운영기관</li> <li>▪ 우편사업</li> <li>▪ 우체국예금</li> </ul>
			기타 특별 회계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시설</li> <li>▪ 농어촌구조개선</li> <li>▪ 광역지역발전</li> <li>▪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li> </ul>
			사회 보험성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기금</li> <li>▪ 고용보험기금 등</li> </ul>
			금융성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li> <li>▪ 수출보험기금 등</li> </ul>
			계정성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자금관리기금</li> <li>▪ 공적자금상환기금 등</li> </ul>
			사업성 (4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택기금</li> <li>▪ 남북협력기금 등</li> </ul>

## 제 2 부

# 2013~2017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 제2부 2013~2017년 경제·재정운용여건

### 1. 대내·외 경제여건

#### (1) 대외여건

##### 2013년

2013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이다.

미국은 주택시장·소비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일본도 확장적 경제정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존은 그간 재정위기 영향 등으로 지속된 경기침체에서 최근 벗어나는 모습이나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 2014년 이후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도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아 회복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13.7월)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세 계	3.1	3.1	3.8	4.4	4.5	4.5
- 선진국	1.2	1.2	2.1	2.6	2.6	2.6
- 신흥국	4.9	5.0	5.4	6.0	6.1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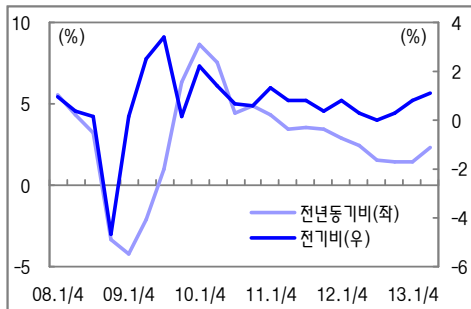
## (2) 대내여건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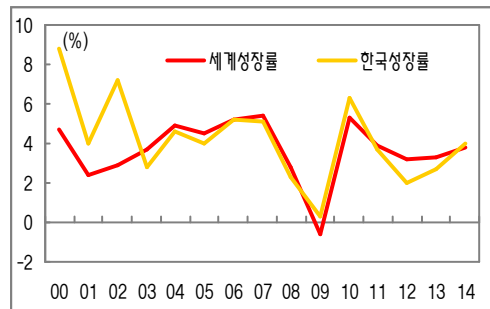
2013년 우리경제는 대외 여건의 점진적 개선, 정책노력 등으로 그간의 저성장 흐름에서 점차 탈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수출 개선세가 예상되고,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내수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

GDP 성장률 추이



세계경제 성장률과 우리경제 성장률



### 2014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00~'07년 평균 4.2% 성장)으로 점차 회복하면서 우리경제도 4% 수준('14년 3.9%, '15년 이후 4.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 재정운용 여건

### (1) 재정수입

#### ■ 국세수입

2013년 국세수입은 지난해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세입 추경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금년 대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년 세수결손에 따른 세수기준선 하락, 취득세 인하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 조정 등은 중기 세입에도 지속적인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2012~201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산은·기은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계획의 변경으로 2012~2016년 계획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한은잉여금 등 비경상적 수입원의 감소도 예상된다.

다만, 현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고 있는 재원의 예산체계 편입, 환경개선 등 분야에서 신규 세외수입 발굴, 징수율 제고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확보 노력에 따른 증가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 기금수입

기금수입은 계획기간 중 경기·고용 회복에 따른 사회보장성 기금 및 여타 수입 증가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가입자 확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년 고용 보험료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2~2016년 계획의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재정지출

###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저출산·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증가하면서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의무지출 소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로 계획기간 중 확대될 전망이다. 이자지출 규모도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의무지출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그 증가속도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경기대응 등을 위한 지출 확대 요구도 지속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근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출 확대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 지원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있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각종 법률개정 추진 등 새로운 지출소요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 각 부처 중기요구 기준 지출증가율은 연평균 6.9% 수준

2013년 1월말 각 부처에서 요구한 2013~2017년간 중기사업계획 기준 지출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 4.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향후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혁 등을 통해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지출 증가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재원소요를 충당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분야 세출절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도 예상된다.

<'12~'16년 계획 대비 '13~'17년 부처요구(조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12~'16년 계획(A)	325.4	342.0	357.5	373.1	389.7	407.6	4.6%
▪ '13~'17년 부처요구(B)	-	342.0	381.5	408.4	431.2	447.1	6.9%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24.0	+35.3	+41.5	+39.5	

▣ 재정정책 관련 국제논의 동향

-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이전에는 재량적 재정정책은 정치적 영향 가능성, 긴 시차, 구축효과 등으로 경기안정화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되었다.
- 위기 이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안정에 기여하였으나,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재정긴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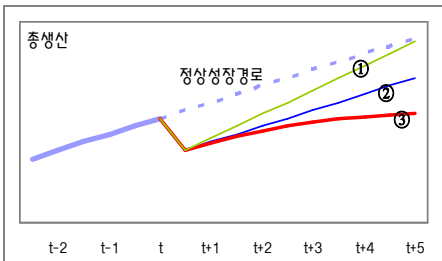
금융위기 전후 재정정책 관련 국제논의동향

구 분		논 의 동 향
위기전(~'07)		· 통화정책 중심으로 경기대응
위기	~'09중반	· 저금리 기조로 통화정책 여력이 부족해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유동성 함정 우려도 제기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 대두 ·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아 구축효과도 크지 않았음
이후	~'11중반	· 재정긴축 필요성 제기: 남유럽 → 중심국으로 확산 · 이자율 상승,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민간투자,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발생 위험성 제기

\* IMF Fiscal Forum('13.4.17~18) J. Brandford Delong 교수 발제자료 참조

- 최근에는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장기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재조명 받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시 이력현상에 따른 실망실업자 발생,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자연실업률이 높아지고 장기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투자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력현상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구 분	내 용
CASE①,②	· 경기침체 이후 정상 성장경로 회복
CASE③	· 장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생산성 저하 등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 ■ 국제사회의 재정정책 권고

- 최근 IMF 등은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국가채무 감축과 단기 성장지원 간 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보다 침체에 재정승수가 크게 나타나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긴축은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이 크므로 재정승수, 재정불균형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자감축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 \* EU집행위는 프랑스, 스페인 등 6개 회원국에 대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시한 연장 권고('13.5.29일)

	지출승수		수입승수	
	확대	감축	확충	감소
경기침체기	1.22	△1.34	△0.40	0.35
경기확장기	0.72	△0.78	0.03	△0.04

\* IMF Fiscal Monitor('12.4월)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별로 대외충격 취약성,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마련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 시사점

- 이러한 국제사회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분간 최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금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 편성 등은 단기적인 경기보완 뿐 아니라 이력효과 완화 등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대응,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장과 건전재정간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명시적인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이행하고 체계적인 재정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 3 부

# 2013~2017년 재정운용방향



## 제3부 2013~2017년 재정운용방향

### 1.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저성장 흐름에서 점차 탈피하는 모습이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신흥국 성장세 둔화 우려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의 성장세 회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당분간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하여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국민 안전·불안 해소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미래 위험에 대비한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 회복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최종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변동, 각종 지출증가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세출 절감, 세입기반 확충, 잠재 재정위험 관리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계획기간 중 재정수지는 2017년 균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 국민의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틀’ 혁신

국가 전체의 총량적인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질적인 성장으로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재정운용의 ‘틀’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안 편성 등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행적·낭비성·전시성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원칙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 2. 중기 재정전망

### (1) 재정수입

#### 재정수입<sup>1)</sup>은 연평균 5.0% 증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13~2017년 기간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성장률 전망 조정, 금년 세수실적 부진, 지방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가율(6.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372.6	360.8	370.7	392.1	413.2	438.3	5.0
(증가율)	(8.5)	(5.0)	(Δ0.5/2.8)	(5.8)	(5.4)	(6.1)	
○ 국세수입	216.4	210.4	218.5	234.5	252.5	270.7	6.5
○ 세외수입	36.9	31.1	26.7	26.5	26.3	26.4	Δ4.0
○ 기금수입	119.3	119.3	125.6	131.1	134.3	141.3	4.3

\* '13년 추경예산 기준

1)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친 규모이며, 예산수입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뉜다.

## 국세수입은 연평균 6.5% 증가

국세수입은 2013~2017년 기간 중 경상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세수실적은 다소 부진하나, 2014년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국세수입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과세 감면 정비·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중기 국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국세수입	216.4	210.4	218.5	234.5	252.5	270.7	6.5
(증가율)	(5.2)	(2.3)	(1.0/3.9)	(7.3)	(7.6)	(7.2)	

\* '13년 추경예산 기준

## 세외수입<sup>2)</sup>은 연평균 △4.0% 감소

세외수입은 2013~2017년 기간 중 연평균 △4.0% 감소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26조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2014년 이후 정부 보유주식 매각대 미반영 등 비경상수입원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 보유주식 매각대 등을 제외한 여타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기술료 세입조치, 환경분야 부담금 신설 등 신규수입원 발굴,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외수입은 정부의 수입 중 국가가 일반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경제부문에서 강제적으로 조달하는 조세수입 이외의 수입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경상이전수입, 차입금 및 여유 자금 회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기 세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세외수입	36.9	31.1	26.7	26.5	26.3	26.4	Δ4.0
(증가율)	(30.5)	(10.0)	(Δ27.7/Δ14.3)	(Δ0.6)	(Δ0.5)	(0.1)	

\* '13년 추경예산 기준

**기금수입은 연평균 4.3% 증가**

기금수입<sup>3)</sup>은 2013~2017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경기·고용 회복 및 가입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과 여타 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 중기 기금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기금수입	119.3	119.3	125.6	131.1	134.3	141.3	4.3
(증가율)	(8.9)	(8.9)	(5.3)	(4.4)	(2.4)	(5.2)	

\* '13년 추경예산 기준

3) 기금의 수입에는 연금보험료, 부담금, 용자원금회수, 이자수입이 있다.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을 합산하여 경상 GDP로 나눈 것을 말한다.

2013~2017년 기간 동안 조세부담률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따라 2017년 20.1% 수준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조세부담률이 2016년 20.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경기둔화로 2013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추경기준 210.4조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조세부담률도 예산 기준인 19.9%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13년 조세부담률이 하락함에 따라 2013~2017년 기간 중 조세부담률은 2012~2016년 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부담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2013~2017년 기간 중 2013년 26.7%에서 2017년 2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

(단위 : %)

	'13'		'14	'15	'16	'17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9.9	19.9	19.7	19.9	20.1	20.1
▣ 국민부담률	26.6	26.7	26.8	27.0	27.3	27.5

\* '13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조세부담률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 국민부담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 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조세부담률에 이를 더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 \text{국민부담률} = \text{조세부담률} + \text{사회보장부담률}$$

####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단위: %, 2010년 기준)

	한국 (2012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0.2	18.5	16.3	28.2	26.3	24.6
국민부담률	26.8	24.8	27.6	34.9	42.9	33.8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2012년)

## (2) 재정지출

### 가. 총괄

####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

정부는 2013~2017년 기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5.0%) 보다 1.5%p 낮은 수준인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2012~2016년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4.6%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의 단계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다.

####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342.0 (5.1)	349.0 (7.2)	357.7 (2.5/4.6)	368.4 (3.0)	384.2 (4.3)	400.7 (4.3)	3.5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243.7	247.6	251.8	258.4	269.4	280.2	3.1
(비중)	71.2	70.9	70.4	70.1	70.1	69.9	
○ 기금지출	98.3	101.4	105.9	110.0	114.8	120.5	4.4
(비중)	28.8	29.1	29.6	29.9	29.9	30.1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비중)	46.3	45.5	47.2	49.1	50.7	51.7	
○ 재량지출	183.6	190.2	188.9	187.6	189.6	193.5	0.4
(비중)	53.7	54.5	52.8	50.9	49.3	48.3	

\* '13년 추경예산 기준

## 나. 의무지출

### ■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9%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지출에 한정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산정방식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 등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사업은 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출규모의 통제 가능성, 재정건전성 등 측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지출은 2013~2017년 기간 중 연평균 6.9%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3.5%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재정지출의 절반을 넘어 2017년 51.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의무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증가 추세에 따라 연평균 5.7%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기초연금(27.8%), 장애인연금(18.3%) 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평균 9.1% 증가할 전망이다. 이자지출은 국가채무 증가, 최근 금리 인상추세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지방이전재원	76.6	76.6	77.4	80.9	89.3	95.8	5.7
○ 복지분야 법정지출	62.2	62.4	69.5	77.6	82.6	88.5	9.1
○ 이자지출	15.5	15.7	17.8	17.9	18.0	18.3	3.9
○ 기타 의무지출	4.1	4.1	4.0	4.5	4.8	4.6	3.3

\* '13년 추경예산 기준

## 다. 재량지출

###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4%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6.9%)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량지출을 낮은 수준(0.4%)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전기획, 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사업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 낭비요인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재량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방이전재원<sup>4)</sup>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부금 결정 구조는 내국세에 연동되게 설계되어 있어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세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지방이전재원은 정부에서 추계한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및 교육세 등 세입 전망치를 통해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세입의 증가에 따라 2013년 추경 기준 76.6조원에서 2017년 95.8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이전재원 전망

(단위: 조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 합 계 】	76.6	76.6	77.4	80.9	89.3	95.8	5.7
▪ 지방교부세	35.5	35.5	36.1	37.7	41.6	44.6	5.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1	41.1	41.3	43.2	47.7	51.1	5.6

4)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에는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이전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다. 지방교부세율은 1995년 13.27%에서 2006년 19.24%(내국세 대비비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은 1995년 11.8%에서 2010년 20.27%로 상향조정되었다.

■ 보건·복지·고용 법정지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무지출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급여, 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13년 추경 기준 7.7조원에서 2017년 8.9조원으로 연평균 3.5%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급여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2013년 추경 기준 2.6조원에서 2017년 2.8조원으로 연평균 2.1%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의료급여는 2013년 추경 기준 4.4조원에서 2017년 4.9조원으로 연평균 2.5%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정대상 확대 등으로 2013년 추경 기준 0.6조원에서 2017년 1.1조원으로 연평균 17.6%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수, 가구당 인원수 등은 '14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물가상승률은 매년 3%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전망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 합 계 】	75,587	77,232	78,213	84,377	86,485	88,645	3.5
· 생계급여	25,902	26,091	25,240	26,695	27,496	28,321	2.1
· 의료급여	42,478	43,934	44,366	45,697	47,067	48,479	2.5
· 주거급여	5,692	5,692	7,285	10,247	10,554	10,871	17.6
· 교육·해산·장제급여	1,515	1,515	1,323	1,739	1,368	974	△10.4

##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은 2013년 6.5조원에서 2017년 7.1조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이다.

###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은 보험료율 인상률('13년 1.6%, '14년 1.7%) 및 4대 중증질환 등 의료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소요분(1,093억원)을 반영하였다.

###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상한)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06년 담배부담금 인상이후 담배 판매량 변화 등을 고려 2014년 담배반출량은 최근3년 결산 수준인 44.3억갑을 유지한다고 전망하였다.

###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

'14년부터 사립학교 직원(대학병원 포함)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사학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법인 부담으로 전환(△1,032억원)하였으며,

\* (현행) 개인 50%, 법인 30%, 국가 20% → (개선) 개인 50%, 법인 50%

보험료는 '14년 확정 보험료율(5.99%), 보수월액 증가율(2.8%) 등을 적용하였다.

### 건강보험 의무지출 전망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b>【 합 계 】</b>	65,128	65,128	69,662	66,749	68,360	70,930	2.2
▪ 가입자 지원(일반)	48,086	48,086	53,030	49,924	51,335	53,700	2.8
▪ 가입자 지원(기금)	10,198	10,198	10,191	10,191	10,191	10,191	0.0
▪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6,844	6,844	6,441	6,634	6,833	7,038	0.7

### ③ 4대 공적연금

#### ○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의 의무지출은 2013년 12.8조원에서 2017년 21.7조원으로 연평균 14.0%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 수급자는 2013년 349만명에서 2017년 46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2013년 10.9조원에서 2017년 16.7조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연금수급인원이 2013년 348천명에서 2017년 430천명으로 연평균 5.4% 증가되며, 퇴직연금 인상률을 매년 3%로 가정함에 따른 것이다.

#### ○ 사학연금

사학연금 의무지출은 2013년 2.0조원에서 2017년 3.0조원으로 연평균 9.9%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수는 2013년 4.8만명에서 2017년 6.9만명으로 연평균 9.1% 증가하는데 이는 연금선택을 및 퇴직자 수 증가, 수급기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3년 평균수급자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다.

#### ○ 군인연금

군인연금기금 의무지출은 '13년 2.7조원에서 '17년 3.4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지급금은 평균수명 증가 및 노령화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및 수급인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수급자 증가치를 3.0%로 가정하였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b>【 합 계 】</b>	284,300	284,300	320,091	368,120	404,389	447,835	12.0
▪ 국민연금	128,303	128,303	145,814	176,720	195,780	216,677	14.0
▪ 공무원연금	109,188	109,188	123,612	136,504	149,404	167,261	11.3
▪ 사학연금	20,264	20,264	22,627	24,707	27,010	29,566	9.9
▪ 군인연금	26,545	26,545	28,037	30,190	32,194	34,330	6.6

#### ④ 노인부문

##### ○ 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13년 96,8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 부분과 연계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2013년 약 3.2조원에서 2017년 약 8.5조원(국비 기준)으로 연평균 27.8%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인구와 급여액은 통계청 노인인구 전망('12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추계를 활용하였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입소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13년 5,412억원에서 2017년 6,391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치매특별등급(등급외 치매질환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신설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등급완화는 없으나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 매년 3%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노인부문 의무지출 전망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b>【 합 계 】</b>	37,509	37,509	57,851	82,824	87,554	91,886	25.1
▪ 기초노령연금	32,097	32,097	52,002	76,799	81,349	85,495	27.8
▪ 노인장기요양보험	5,412	5,412	5,849	6,024	6,205	6,391	4.2

⑤ 보훈부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2013년 2조 2,806억원에서 2017년 2조 5,73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은 최근 3년간의 보상금 인상률(4%) 및 국가유공자 기대여명 등을 고려한 것이다.

1급과 2급 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전망기간 동안 의물가상승률(3%) 등을 반영하여 2013년 615억원에서 2017년 69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13년 4,650억원에서 2017년 4,95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7년까지는 지급단가를 매년 월 1만원 인상하고 지급인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감소 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외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는 물가상승율, 최근 진료비 실적 등을 적용한 결과, 2013년 4,702억원에서 2017년 5,130억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훈부문 의무지출 전망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 합 계 】	36,286	36,286	37,375	38,272	39,250	40,286	2.6
▪ 보상금	22,806	22,806	23,435	24,163	24,942	25,736	3.1
▪ 간호수당	615	615	609	624	654	692	3.0
▪ 참전명예수당	4,650	4,650	4,822	5,042	4,986	4,959	1.6
▪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	4,702	4,702	4,993	4,806	4,994	5,130	2.2
▪ 기타	3,513	3,513	3,516	3,637	3,673	3,769	1.8

## ■ 이자지출

###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2013년 추경 기준 10.8조원에서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2014년 12.7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감소) 등으로 2017년 13.0조원 수준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 ○ 국민주택기금 국공채이자

국민주택기금 국공채이자는 2013년 추경 기준 1.6조원에서 2017년 1.9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국공채이자상환액은 주택 인·허가, 등기·등록시 발행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만기)에 따른 이자가 대부분이다. 주택건설 경기 등에 따라 발행액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회복이 예상되어 채권발행액 증가로 이자상환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우체국예금 지급이자는 예금수신고 증가('13년 60조원 → '17년 67.9조원) 및 14년 조달금리(3.67%) 유지 등을 전제시 2013년 추경 기준 2.1조원에서 2017년 2.3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전망이다.

### 이자지출 전망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b>【 합 계 】</b>	155,496	157,415	178,271	178,552	179,642	183,261	3.9
▪ 공공자금관리기금	106,257	108,056	126,838	127,322	128,468	129,955	4.7
▪ 국민주택기금	15,833	15,833	15,926	16,670	17,124	18,712	4.3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0,522	20,522	23,138	22,772	22,425	23,098	3.0
▪ 기 타	12,883	13,003	12,370	11,788	11,625	11,496	△3.0

## ■ 기타 의무지출

### 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sup>5)</sup>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논 1ha당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sup>6)</sup>하기 위해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허용보조)이다.

2017년까지 지원단가를 1ha당 10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임에 따라 의무지출은 2013년 6,984억원에서 2017년 8,300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단가는 단계적 인상계획을 반영하였고, 지원대상 농지는 논지 전용 등으로 지원대상('98~'00년간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농지가 지속 감소('09 : 891천ha → '12 : 866천ha)하는 점을 고려, '14년(860천 ha)부터 매년 10천ha씩 감소함을 가정하였다.

### ② 유엔 PKO 예산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 중 유엔 PKO 예산분담금은 2013년 2,464억원에서 2014년 1,680억원, 2017년 1,792억원으로 '13~'17년 전체적으로 연평균  $\Delta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감소세는 '13년도말까지 채납액 4,000만불 전액해소에 따라 이후 분담금 감소액을 반영한 결과이며, 2014년 이후에는 유엔 PKO 미션 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추세를 반영하였다.

### 기타 의무지출 전망

(단위: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b>【 합 계 】</b>	40,710	40,710	40,429	45,064	48,005	46,404	3.3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6,984	6,984	6,880	7,650	7,560	8,300	4.4
▪ 유엔PKO예산분담금	2,464	2,464	1,680	1,792	1,792	1,792	$\Delta 7.7$
▪ 기 타	31,262	31,262	31,869	35,622	38,653	36,312	3.8

5)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쌀소득고정직불금 등 9개의 직불금이 시행 중에 있음

6)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 재정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

2013년 사회보장성기금<sup>7)</sup>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추경편성에 따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당초 목표치  $\Delta 0.3\%$ 에서  $\Delta 1.8\%$ 로 상승하였다.

2014년의 최근 경기회복세 뒷받침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따라 금년 추경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규모를 축소하여 2017년에는 균형수준인  $\Delta 0.4\%$ 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3~2017년 기간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가 개선되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GDP 대비 흑자비율도 2013년 0.9%에서 2017년 2.2%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 〈 중기 재정수지 전망 〉

(단위 : 조원, %)

	'13'		'14	'15	'16	'17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Delta 4.7$	$\Delta 23.4$	$\Delta 25.9$	$\Delta 17.0$	$\Delta 14.1$	$\Delta 7.4$
(GDP대비, %)	$\Delta 0.3$	$\Delta 1.8$	$\Delta 1.8$	$\Delta 1.1$	$\Delta 0.9$	$\Delta 0.4$
※ 통합재정수지	30.6	11.8	13.1	23.7	28.9	37.6
(GDP대비, %)	2.3	0.9	0.9	1.6	1.8	2.2

\* '13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7)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 국가채무비율은 30%대 중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14년 36.5%로 2013년 추경기준 36.2%에 비해 소폭 상승하나, 2015년 이후 재정수지 개선 노력에 따라 하락세를 보여 30%대 중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비율이 일정하거나 감소한다면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34.8%로 OECD 평균인 108.8%<sup>8)</sup>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 중기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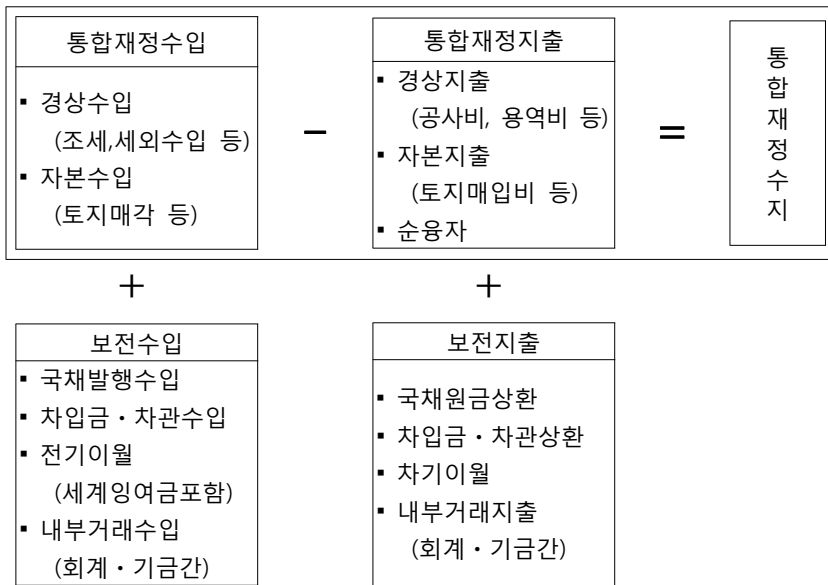
	'13'		'14	'15	'16	'17
	본예산	추경				
■ 국가채무	464.6	480.3	515.2	550.4	583.1	610.0
(GDP대비, %)	34.3	36.2	36.5	36.5	36.3	35.6
○ 적자성 채무	229.3	245.2	274.1	294.7	312.8	328.6
○ 금융성 채무	235.3	234.4	241.2	255.7	270.3	281.4

\* '13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8) 주요국 국가채무비율(%,'12년 기준) : (미국) 106.3, (일본) 219.1, (독일) 89.2, (영국) 103.9

▣ 통합재정수지

- 당해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은 예산, 기금 등 정부 재정수입·지출 규모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는 장래의 연금·보험 등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산정시 제외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3.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 재정준칙 강화

최근 경기둔화 등에 따라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재정총량 관리를 통해 단계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 등에 일정한 목표치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재정지출 신설시 제약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재정운용 방식을 의미한다. 각국은 각 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재정여건, 정치체제 등에 따라 법률, 중기계획, 내부규칙 등 다양한 형태로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및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국세감면 비율이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를 더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새로운 국세감면 요청 시에는 기존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 등을 제출토록 하는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며, 대내외 여건변화에 민감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최근 의무지출 비중의 상승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을 신설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별도 재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PAYGO 원칙 도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를 확대하고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평가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등 재정사업 평가기능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유재산 관리의 경우 사용료 감면, 양여 등 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국유재산 양여시 국유재산 총괄청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유상 사용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 **■ 전면적인 재정개혁 추진으로 지출 효율화**

각종 복지지출과 의무지출 확대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Value for Money)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세출구조조정 노력에 더하여 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범부처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세출예산 사업군은 중복지원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를 정비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재정융자 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투자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업무추진비 및 여비, 행사비 등을 절감하여 전면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에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다.

## 세원투명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 도래시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세출예산과의 중복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재설계 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기본원칙 하에 고질적 조세포탈·고소득 자영업자·역외탈세 등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되, 성실사업자·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배려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금융시장 육성 필요성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부채 등 잠재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

최근 재정위기가 재정수지 악화 등 재정운용 측면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대상도 기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관에서 자산 2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한편, 중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관리지표(재정수지, 국가채무) 외에도 지방정부, 공기업, 차환위험(Rollover risk) 등 재정위기로 전이 가능한 잠재 위험부문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점검지표를 마련하여 분석·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연금·의료·교육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중-단기 재정운용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결산과 성과관리 간 연계로 체계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단계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연계하고, 사후적으로는 성과보고서와 결산서를 연계·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해 나간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 분산된 공개매체를 일원화하고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비과세·감면, 국유지·국유재산 현황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정보의 원칙적 공개를 추진한다.

2013년 세법개정 기초

- ◆ **(국정과제 적극 지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 ◆ **(국민중심 세제 운영)**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있게 조세제도를 운영  
\*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재작성
- ◆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  
방향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 성장동력 확충·중소기업 지원
- 창조경제 기반 구축 [벤처투자 활성화]
- 고용률 70% 달성 지원
- 문화예술 진흥

- 조세의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납세편의 제고 등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비과세·감면 정비
- 과세기반 확대
- 지하경제 양성화

## 4.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1) 기본방향

#### 경제부흥 :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로 창의적 자산이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 기회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국민행복 : 맞춤형 고용·복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

생애주기나 수혜대상에 따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수혜자의 근로와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늘려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불량식품) 근절 및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 문화융성 : 문화향유 기회 확산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스포츠, 융·복합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 ■ 평화통일 기반구축 : 외교안보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핵심전력 확보 및 방위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병들의 보람있는 군생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정착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대응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ODA 지원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국가위상 및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 (2)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조원, %)

구 분	'13	'14	'15	'16	'17	'13~'17 연평균
1. 보건·복지·고용	97.4	105.9	113.5	120.3	127.5	7.0
2. 교육	49.8	50.8	53.2	58.1	62.1	5.7
3. 문화·체육·관광	5.0	5.3	5.7	6.5	7.8	11.7
4. 환경	6.3	6.4	6.3	6.3	6.3	0.1
5. R&D	16.9	17.5	18.3	19.1	19.9	4.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5	15.3	14.6	13.8	13.2	△3.9
7. SOC	24.3	23.3	22.0	20.5	19.2	△5.7
8. 농림·수산·식품	18.4	18.6	18.6	18.6	18.6	0.3
9. 국 방(일반회계)	34.3	35.8	36.9	38.5	40.1	3.9
10. 외교·통일	4.1	4.2	4.2	4.3	4.3	1.2
11. 공공질서·안전	15.0	15.7	16.3	16.9	17.5	3.9
12. 일반·지방행정	55.8	58.7	60.5	64.6	68.1	5.1

### ■ 보건·복지·고용 분야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13~'17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33.2 → '17년 36.6조 원). 이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료원, 농어촌 보건소 등의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산부인과 등 필수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회복지통합 정보망 고도화 등 복지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적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항구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낭비적인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 ■ 교육 분야

교육 분야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8.7 → '17년 11.0조원). 이는 대학 연구·교육역량 강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의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은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을 확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등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전문인재 양성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학 시설확충 등은 단계적으로 재정투자를 축소해나갈 것이다.

## ■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1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5.0조원 → '17년 7.8조원). 이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별 지원확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문예기금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초예술 창작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복지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뮤지컬·영화·게임 등 5대 킬러콘텐츠와 MICE·의료·크루즈 등 고부가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 확대가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로 이어져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도 이바지하도록 계획수립부터 집행과정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 환경 분야

환경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Delta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6.11조원 → '17년 6.07조원). 이는 4대강 사업기간('09~'12) 집중 투자된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그 간 축적된 스톡수준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등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자금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기존 융자금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함에 따른 지출 감소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질개선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재정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대규모 재정수반을 초래하는 법안 제·개정 및 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지출소요 및 재원대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 R&D 분야

R&D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16.8조원 → '17년 19.9조원). 이는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한국형 발사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등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기술의 사업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투자하는 등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R&D 투자 확대에 양적 규모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사업구조 효율화,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Delta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14.3조원 → '17년 12.2조원) 이는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되, 민간투자 확충을 유도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 융자 등은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15년 이후 지출 감소가 전망된다.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출소요 및 재원대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 SOC 분야

SOC 분야 재량지출은 '13~'17년 중기계획 기간 중 연평균  $\Delta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예산 24.3 → '17년 19.2조원) 이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수준을 감안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SOC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면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용성·안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완료, 2015년 88올림픽 고속도로 완공 등 대형사업 완료로 인해 중기 계획 기간 중 지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출소요 및 재원대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량지출은 '13~'17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Delta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17.2조원 → '17년 17.0조원) 이는 '15년 농촌진흥청 등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16년 이후 대규모 지출 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농어업 경쟁력 확보, 농수산물 수급 안정 등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보조금 및 융자사업 내실화, 대규모 재정수반 계획의 사전 타당성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 국방 분야

국방 분야 재량지출은 '13~'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33.3 → '17년 38.9조원) 이는 북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식·피복, 군수지원 등 국방비 내 경직성 지출도 일정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군사시설사업 등의 중복투자 여부, 군사장비 가동률 점검 등으로 비효율적 요인을 해소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앞서 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원절감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 외교·통일 분야

외교·통일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3.7 → '17년 4.0조원). 이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한 지원 확대 등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향후 외교·통일 분야의 지원 확대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사업 계획수립,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 공공질서·안전 분야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량지출은 '13~'17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14.9 → '17년 17.4조원) 이는 경찰인력 2만명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사회악 척결, 치유적 사법제도 운영 등 사법선진화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09년 이후 급증한 재해예방사업 투자규모는 조정하고 유해물질 유출 등 새로운 위해요인 예방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 일반·지방행정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년 9.1조원 → '17년 10.0조원). 이는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정부 3.0지원 확대, 대통령선거 실시 지원, 세종청사 이전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 지원 등을 위한 지출소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지차체·민간보조 사업 중 실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제 4 부

#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 1. 보건·복지·노동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대폭 확충하여 왔다. 복지분야 투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하였으며, 최근 복지지출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정투자 추이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노동 분야(조원)	68.8	80.4	81.2	86.4	92.6	7.7

\* '08년, '09년 추경 포함

지난 5년간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기조에 따라 각종 복지제도를 확충해 왔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해 왔으며, 수혜대상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급격한 복지지출 증가에 걸맞게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일과 복지의 연계 강화

국민의 생애주기나 생활영역에 따라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일을 통한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성장』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지원-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제로 개편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

경제여건의 변동성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해 나간다. 지원기준의 합리적 개편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13년부터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인상 등을 통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장애 1급에서 1~2급으로 확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수혜요건을 낮추었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 '13년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 ■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로 맞춤형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금 (연 5,000원)을 폐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확대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학생에게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추가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장년·노인층에게는 4대 중증질환 등

관련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구입, 전세자금 확대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혜대상별로는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장애인에겐 현행 10만원인 장애인 연금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1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 ■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활성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분만취약 지역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확대 및 취약지역 대상 응급의료기관도 계속 육성할 계획이다.

## ■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복지지출 효율화 유도

복지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일선 사회 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통합수행을 위해 “내일행복지원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위해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 초기상담, 급여신청,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지원기관 연계 등

〈 보건·복지·고용 분야 투자계획〉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노동	97,403	105,873	113,533	120,290	127,460	7.0
○ 사회복지분야	88,671	96,758	104,800	111,414	118,326	7.5
▪ 기초생활보장	8,560	8,823	9,510	9,789	10,063	4.1
▪ 취약계층지원	1,627	1,794	2,057	1,952	2,002	5.3
▪ 공적연금	33,138	36,403	41,348	44,611	48,786	10.2
▪ 보육·가족·여성	4,520	5,311	5,142	5,620	5,762	6.3
▪ 노인·청소년	4,464	6,520	9,166	9,817	10,390	23.5
▪ 노동	13,891	14,487	14,751	15,195	15,880	3.4
▪ 보훈	4,315	4,413	4,501	4,611	4,699	2.2
▪ 주택	17,473	18,262	17,454	18,823	19,870	3.3
▪ 사회복지일반	682	744	871	996	874	6.4
○ 보건분야	8,732	9,114	8,734	8,876	9,134	1.1
▪ 보건의료	1,951	1,840	1,753	1,726	1,724	△3.0
▪ 건강보험	6,513	6,966	6,675	6,836	7,093	2.2
▪ 식품의약품안전	268	307	305	313	316	4.2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제로 전환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제로 전환되어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어(all or nothing) 일부 지원만 필요한 위기 가구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감소하게 되므로 근로 증가 및 탈수급 유인이 적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부양자가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자활사업은 희망리본사업과 같은 성과 중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며, 취·창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을 차상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희망키움통장 II).

## ■ 일하는 방식 및 근로시간 개혁 지원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연간 실 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방식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확대,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비경활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개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직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사업주가 교대제 개편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기존 컨설팅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14년부터 설비투자 비용 지원 및 기존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장시간 근로방식 개편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 ■ 현장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훈련의 취업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 획일적인 물량제의 경우 폐쇄적·경직적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현행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장점 이면에 훈련과정, 미용, 요리 등에 치중되어 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기업·대학이 공동으로 훈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를 취업과 연계시키는 지역·산업 공동형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성과를 고려하여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기업수요에 부응하여 바이오, 플랜트, 서비스 분야 등 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에서 직무 중심으로 배우고 이를 통해 학위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2014년도에 도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스펙이 아닌 직무중심의 채용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청년층이 고용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함과 동시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중장년의 경우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험 많은 실버 세대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시니어 과학인의 과학관 큐레이터 기회제공,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을 통해 노년세대의 사회활동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 ■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장기 실업자, 조건부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일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상담-직업훈련-취업지원을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2014년에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 빈곤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201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를 신설하는 등 높은 수준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극빈곤층인 노숙인, 건설인력, 결혼이민 등의 근로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알콜 중독자, 노숙자 등 기존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어려운 계층의 취업알선을 위해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2014년 신규 도입한다.

## ■ 장애인지원 정책의 내실화 및 소수 장애인 지원 강화

정부는 이미 구축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틀을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연금 도입(14.7월)과 연계

하여 지원 단가를 현재('13년 현재 9.7만원)의 두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혜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증·취약 장애인들에 대한 응급안전망 시스템을 '14년까지 1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연 320시간에서 연 480시간으로 대폭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 기조를 유지하여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등급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장애 등급 심사시 필요한 많은 구비 서류들을 등급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발급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필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최소 3개 기관 이상의 병원 등을 방문해야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장애인 개별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소수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 및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 무상보육 기반 구축 및 보육 서비스 질 제고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보다 확고히 할 계획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0~5세 아동은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지급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0~5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양육지원을 보장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 예비비 및 특교세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국고보조율 10%p 인상을 통해 항구적으로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연간 8,000억원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및 급식 부실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확대하고,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늘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의무화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품질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전예고 없이 무작위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사후관리 개소수를 늘려 평가 당시에만 품질이 유지되고, 이후 어린이집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실제 사용 연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져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 대책 강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14.7월)하여 연금액을 현행('13년 9.7만원)의 두 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쟁력있는 시장형 일자리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도 향후 5년간 매년 최소 5만명씩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단가도 현행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40만원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직 퇴직자들을 활용하는 재능활용 노인일자리를 15천명에게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항노화 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14년 신규)을 통해 노인진입 예정층의 근로 기간을 늘려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한 준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13~’15)(‘12.7월)」 등에 따라 치매조기검진, 예방관리사업 및 치매병원 기능보강도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4년부터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여 그동안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등급외 치매노인 49천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12.5월)」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정착에서 사회통합까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조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입국전, 입국후 초기 적응기, 가족형성, 통합기 등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수요를 감안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배치 상황을 점검하여 지원 기반을 효율화하고, 2014년부터는 정착 및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상담·정보제공·교육기관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담당할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새로이 50개소에 배치할 계획이며, 입국 5년 이상 결혼이민자와 초기 결혼이민자 간의 멘토링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지도사 처우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 및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시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으로 정책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저소득 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 기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방과후 아카데미 등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 종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맞벌이 가정을 배려하여 최대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기본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협력학습 강화 등의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고, 꿈과 끼를 살려주도록 자유학기제 도입 및 학교체육 활성화, 예술체험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안전지역'을 지정하고, 학교폭력 전담 상담·치료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여성 보호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4년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4개소, 성폭력 상담소 4개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인 가족보호시설 6개소, 주거지원시설 40호를 추가 지원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 맞벌이 등 취약가족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간병비와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고, 부모의 사정으로 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피해 아동에게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치료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전화인 1366 긴급전화에 상담원과 긴급피난처를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활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인 등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설치 등 예방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내집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지급대상 확대·임대료 지원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민층의 내집마련 및 전세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금년 7.65조원에서 9.36조원으로 22.4%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연간 4.6만호 수준 공급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공급계획(만호, 사업승인 기준) : ('13)1.0, ('14)4.6, ('15)4.8, ('16)4.8, ('17)4.8

## ■ 취약지·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료원,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산부인과 등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병원에서도 전문질환과 관련한 질 높은 진료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심뇌혈관센터 건립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암환자, 희귀난치성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국내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조성을 통해 신흥국 의료현대화 시장 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통역사 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중동환자 중점 유치를 위해 중동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 ■ 불량식품 근절 등 먹을거리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투자 강화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불량식품 근절 기획감시, 불량식품 근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단계별(생산-제조-수입-유통-감시)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오염물질 조사, 식품안전인증(HACCP) 확대, 위해상품 사전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도입,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를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환경도 조성한다.

## ■ 국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건강 증진과 육아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부담금(현행 1회당 5천원)을 2014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핵 등 법정전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 집중치료 및 예방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

힘으로 지원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자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응급실 내원 자살지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응급환자의 민간이송의 경우 구급차 불법 운행 및 이송료 부당징수 사례가 발생, 이의 해소를 위해 민간이송업자의 구급차에 미터기를 설치하여, 이송료 지불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의료기관의 휴일·야간 응급수술 실적을 체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응급환자의 수술률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실 내원이 불필요한 경증 및 중증이하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이를 통해 진료비용 경감 및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추진하고,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월 1만원 인상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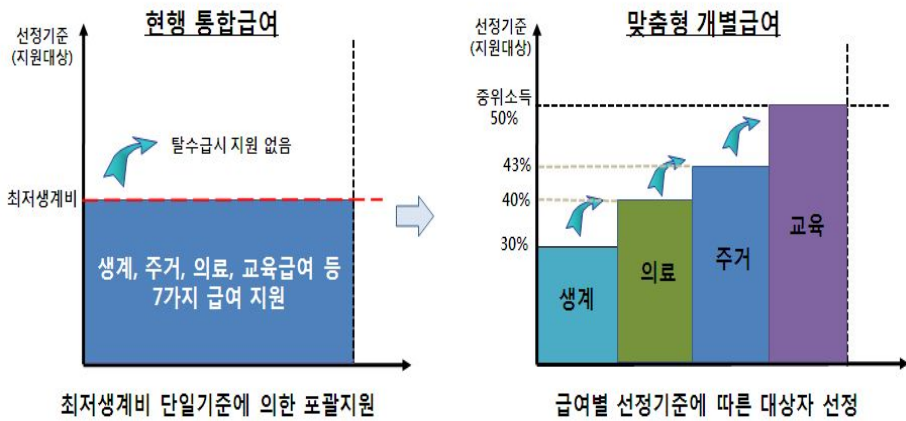
보훈병원 진료비 확대 및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3년		'17년
▪ 기초연금 수급자수(만명)	405	⇒	498
▪ 기초 수급자 자활 성공률(%)	30	⇒	40
▪ 행복주택 공급(만호, 누적, 사업승인 기준)	1.0	⇒	20.0
▪ 고용률(15~64세, %)	64.6	⇒	70
▪ 어르신 일자리(만명)	23	⇒	43
▪ 4대 중증질환 연간 진료비 부담(만원)	94	⇒	34

201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례1】**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4인 가구 가장 김모씨가 165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현행) 생계·주거 등 급여 수급(소득증가) ⇒ 모든 급여 중지  
(개편 후) 생계·주거 등 급여 수급(소득증가) ⇒ 주거급여 수급

**【사례2】** 본인 소득액 30만원, 아들가구(4인) 소득이 400만원인 독거 노인 류모씨의 경우

(현행) 선정 기관 초과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  
(개편 후) 부양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 주거 등 급여 수급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기준 614만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2.2%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불충분한 노후준비,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내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빈곤이 매우 심각하다. '11년 OECD 기준 노인빈곤률(중위소득 50% 이하)은 45.1%로 매우 높다. 빈곤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는 하나의 사회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부안에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을 2013년 약 9.7만원에서 2014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기초연금 확대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13~'17년간 매년 5만명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재능활용 노인일 자리를 신설하였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 등으로 노인 빈곤 해소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 등 각종 노인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해설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어린이 예방접종은 필수예방 접종과 선택예방 접종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소아마비, 풍진, 일본뇌염, 수두, 뇌수막염 등 총 12종의 감염병이 필수예방 접종 대상이다.

정부는 선택예방 접종 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예방 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현재 회당 5천원)을 2014년부터 국가 부담으로 전환 할 계획이다. 이에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민간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책해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비경활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풀타임·장시간 근로관행에 익숙한 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소극적이고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질이 낮고 비핵심 업무라는 편견이 있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및 초기 노무관리 비용 부담 등 상용형 시간선택제 창출에 따른 기업의 애로요인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300%)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직무와 학교 교육의 불일치로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재교육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력이 채용, 승진, 사회적 대우 등의 절대적 기준으로 되고 있어 직무와 상관없는 경우에도 학력 취득을 위해 과잉투자를 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서 기업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대학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2014년 1,000여개 기업을 시작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교수기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R&D 자금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도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 학교 등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2. 교육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창의·인성교육 확산 등 고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체계 구축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8년 30.8조원에서 2012년 38.4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하였다. 이는 내국세 규모의 증가와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4%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 내국세의 20.0%로 인상한데 이어 2010년부터 20.27%로 추가 인상된데 기인한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통해 창의·인성교육 기반 인재 양성, 교과교실제 학교 지원, 진로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등의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투자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008년 29.2명에서 2012년 24.3명으로 낮아졌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같은 기간 21.3명에서 16.3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정보화 지원 등 저소득층 4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밖에 다문화·탈북·장애학생·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농어촌학교 지원 및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등 주요 교육복지 체계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 지원

학생들의 창의·인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입학사정관제를 추진하였고,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아울러 고른 고등교육 기회 확충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 등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였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정보공시제도 도입 및 공시항목 확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추진, 대학 평가·인증제도 도입,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했으며, 분산된 재정지원  
 방식을 통합하여 객관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과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을 추진했으며,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 추진과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World Class University) 및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BK21; Brain Korea 21)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충해 왔다.

## ■ 학업과 일자리를 연계한 평생교육 저변 확대

평생·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학업과  
 일자리를 연계한 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유도해 왔다. 성인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마이스터고와 특성  
 화고를 집중 지원하여 선취업 후진학 풍토를 조성했다.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원) : ('08) 30.8 → ('10) 32.3 → ('12) 38.4
- \* PISA 2009 한국 순위 :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 ('08) 7.2 → ('10) 3.7 → ('12) 2.3
- \* IMD 교육경쟁력 순위(위) : ('09) 36 → ('10) 35 → ('12) 31
- \* 평생학습참여율(%) : ('09) 28.0 → ('10) 30.5 → ('12) 35.6

### 〈 교육 분야 재정투자 추이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조원)	36.0	36.9	38.3	41.2	45.2	5.9%

\* '09년 추경예산 기준: 39.2조원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마련,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등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입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연구여건 개선

대학별 강점분야에 대한 특성화 전략에 따라 교육, 연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대학의 학부·학과 특성화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역량강화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국립대학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지원하는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착수한다. BK21 플러스 사업도 지속 지원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양성과 대학 연구 저변 확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의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전문) 대학 육성 사업(LINC)을 지속 추진한다. LINC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별 현장실습과 취업·창업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구축과 지역 특성화 산업분야 인력 양성, 대학의 창업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 직업교육 강화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미래 국가경쟁을 주도할 청년인재 양성과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과 연계된 학습모듈 개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후진학 경로를 마련하여 '선취업 후진학'의 인프라를 강화한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재직자의 계속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전문대학의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현장 선호도 높은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추진할 것이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질 높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과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충한다. 든든학자금(ICL; Income Contingent Loan)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의 실질적 제로화, 군복무중인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면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대 공공기숙사와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등 대학 기숙사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애·다문화·탈북학생들의 조속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두텁게 하여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다.

### 〈 교육 분야 투자계획 〉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	49,770	50,818	53,216	58,147	62,088	5.7
○ 고등교육	7,681	8,674	9,272	9,729	10,340	7.7
○ 초중등교육	41,236	41,467	43,352	47,816	51,234	5.6
○ 평생·직업교육	733	564	476	479	385	△14.8
○ 교육 일반	121	113	116	122	129	1.7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을 추진한다. 토론·실습·체험 중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며,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마련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 ■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율화 기반 위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고교교육 중심의 대학입학전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다. 대학입학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지표·부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이 궁극적으로 고교교육과 연계되고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로 대학 교육역량 강화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총장책임경영 체제에 기반한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보 분석과 대학 정보공시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 지역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현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 양성된 인재는 지역을 이탈 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 발전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 세계 수준의 대학 연구역량 강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대학별 특성에 따른 우수 고급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BK21 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학원 연구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을 통해 사업단 단위의 대학원 교육·연구 저변을 확대하며, 대학원생의 학업몰입도 제고를 위해 우수 박사 과정생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 ■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을 통한 대학의 취업창업역량 강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LINC사업을 통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구축, 지역 특성화 산업분야 인력양성, 취업 및 창업 교육의 내실화를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를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도 강화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이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전담기구 등을 확충하여 대학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우수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지속 추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을 확충한다. 또한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금리를 최근 5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유지하여 실질금리 제로화를 달성하고,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대학생 및 학부모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미래 국가경쟁을 주도할 청년인재 양성과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곧바로 산업체의 직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학습중심대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 단계에 있는 평생학습과정에 손쉽게 접근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대 등의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인프라를 활용한 블랜디드 러닝 시스템을 통해 성인 친화형 개방형 교육체제 확산과 재직자 맞춤형 교육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소외지역 중심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대학별(학과별)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 체제에 맞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를 육성하여 국가전략산업 및 지역연계 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필수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체와 전문대학 간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 글로벌 국제교육 협력을 통한 인재 네트워크 구축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장학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이 큰 중점협력국과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UNESCO,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도 활성화하여, 국제 사회에 대한 전략적 안목을 배양하고,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3		'1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원)	41.1	⇒	51.1
▪ 3~5세 유아 취원율(%)	90.6	⇒	93.7
▪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수(명)	19.4	⇒	16.4
▪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률(%)	55	⇒	60
▪ 평생학습 참여율(%)	36.6	⇒	40.4

### ■ 추진배경

-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해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 ■ 중점과제

-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 지원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지역인재전형, 취업 지원 확대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대학의 기능 전환 및 협력체제 마련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지역과 연계된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되, 부실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원화 전략 추진
- 재정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방대학의 우수학생 유치, 좋은 교육과 일자리 제공, 지역의 정주여건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발전체계 구축

### ■ 추진배경

-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대학 배출 인력 간의 인력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필요

### ■ 주요 사업 내용

- 대학의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
  - 국가 및 지역의 전략선도 산업과 대학의 주력분야 등과 연계하여 우수 직업인 양성 및 고용을 확대
- 이를 위해 '17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를 육성할 계획이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NCS) 운영으로 산업체와 전문대학간 배출되는 인력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고 현장성 높은 직업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

###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경로를 마련하여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기여
-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전문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할 방침

###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향유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계층·지역·세대 간 문화격차 완화 요구,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콘텐츠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 증대가 특징이라 하겠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과거의 예술단체·전문체육과 같은 문화 생산자 위주에서 벗어나 문화시장 전반의 수요층을 두텁게 하고 국민들이 직접 뛰고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하였다.

생활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계층에게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을 보급하는 한편, 학교와 사회 각지에 예술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국민생활속에서의 문화 향유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 \* 예술강사 수혜 학생 : '08) 58만명 → ('12) 190만명, 228% 증가
- \* 문화이용권 수혜자 : '08) 22만명 → ('12) 160만명, 627% 증가

또한,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문화산업 육성에도 노력하였다. 꿈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은 영화·게임·대중음악·패션·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융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였고 관광산업도 국제회의업(MICE), 의료관광, 크루즈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여 관광수지 개선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2008~2012년간 문화분야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8.7%대로서 총지출 증가율 5.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 〈문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 문화분야(조원)	3.3	3.5	3.9	4.2	4.6	8.7%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문화향유 △콘텐츠 산업 △관광산업 등 각종 지표에 있어, 지속적인 상승효과를 창출하였다. 2012년의 경우 한국 영화 관람객 1억명,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런던 올림픽 종합순위 5위와 '싸이'로 대표되는 K-Pop이 K-Culture로 확산되는 등 한류 열풍도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 \* 문화예술/체육 관람율 : '08년(67.3% / 34.2%) → '12년(69.6% / 34.9%)
- \* 콘텐츠 산업 총 매출액 : '08년(66조원) → '12년(92조원)로서, '12년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7위 (2.7%)
- \* 외래관광객 증가율(%) : ('07) 4.8 → ('09) 13.4 → ('11) 11.3 → ('12) 13.7

그러나, 기초 예술분야는 불안정한 고용과 사회안전망의 취약으로 많은 예술종사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소프트파워의 원천인 콘텐츠 수출도 게임 등 일부 종목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급증하는 관광객에 비해 중저가 호텔 등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산업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양극화에 따른 계층·지역간 문화향유 기회 격차 해소에도 지속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각 부문별 투자전략과 함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의 구조조정과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등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체계 강화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속 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기초 지자체별 잘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이 모여 동호회와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형 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14년 130억원, 신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젊은이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산업단지나 폐산업시설 등에는 작은 도서관·체육시설·문화강좌 등이 결합된 문화공간과 문화 상징물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과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예술인에게도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산업공간을 문화로서 아름답게 재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에는 우선 10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성해 나가고, 그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공공 도서관·박물관 등의 야간 연장개관을 확대 지원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 저자가 직접 설명해 주는 '길 위의 인문학' 등 공공 인문학 강좌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새로운 국립시설도 개관된다. 서울의 중심부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이 본격 개관 되고,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하여 전북 무주에 '태권도 공원'도 개장된다. 또한, 나주박물관, 세종도서관 등도 차질없는 개관과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를 견인할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한국형 창조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창조·감성이 융합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콘텐츠 부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영화·드라마·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대중음악·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투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작기반 확충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콘텐츠 분야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분야 조성액을 포함하여 7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민간과 매칭을 통하여 창의적 콘텐츠 기업에 투자해 나간다. 창의력·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들은 보증강화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창의적 인재의 창업 활성화와 교류 발전을 위해 2014년 콘텐츠코리아 랩(Lab)을 세군데 신규 조성하고 문화산업의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 ('14) 700억원(신규, 방송 포함)
- \* 콘텐츠코리아 랩 :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이 가능한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융합 실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14년 102억원)

## 외래관광객 유치 여건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육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산업 용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된다.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높아진 여가수요에 부합하도록 관광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숙박시설 및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광활성화 기반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 관광산업 용자 : ('13) 2,920억원 → ('14) 5,250억원 (2,330억원 증)

광역·지역 단위의 볼 거리, 먹을 거리, 체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국제회의(MICE)·의료관광·크루즈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관광 분야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캠핑'이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의 캠핑장 조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시대에 맞게 생태녹색관광·스토리가 있는 문화탐방로·슬로시티 등도 만들어 국내관광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선장을 통한 스포츠 선진국 구현**

“건강 100세 시대”에 맞추어 국민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많은 유럽국가에서 시행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조성하여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회원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별 체력 수준을 정확히 알고 적합한 운동처방을 제공해 주도록 광역 지자체별 거점체력센터를 지정하여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해주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본격 운영한다.

- \*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 ('13) 48억원 → ('14) 78억원 → ('17) 111억원
- \* 국민체력인증제 : ('13) 40억원 → ('14) 56억원

국가대표 육성 등 전문 스포츠 지원도 강화된다. '17년까지 진천에 국제수준의 국가대표 종합훈련장을 완성하고, 스포츠 과학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가대표와 후보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개최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체육대회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차질없이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투자계획〉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문화 및 관광분야	5,028	5,314	5,713	6,528	7,814	11.7
○ 문화예술	2,272	2,487	2,760	3,324	4,356	17.7
○ 관광	1,097	1,243	1,246	1,322	1,318	4.7
○ 체육	1,074	981	1,059	1,141	1,253	3.9
○ 문화재	585	603	648	741	887	11.0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면적 개편 및 지원 확대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하여 기초예술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민간·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을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도 대폭적으로 확대(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규모 1,223억원('13년)→1,875억원('14년) 53% 증가)한다. 현재의 과도한 소액·다건식 보조사업, 일부 민간단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간다.

금번 개편에서는 ① 민간 예술단체 지원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반 회계 9개 사업 이관)하고, ② 선별·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③ 지역 창작사업과 문학, 미술 뮤지컬 장르 등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단체 대관료 지원, 창작공간 지원 등 민간 공연단체에게 선별 지원하는 5개 사업을 폐지하고 '기초공연예술(뮤지컬 제외)'의 공연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대관료·무대장치·조명 등 스텝비·특정 고가장비·홍보비를 패키지형태로 지원하는 '기초공연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각 공연단체가 공연장에 대관신청을 하면,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자격확인후 각 공연장과 협약된 비용분을 공연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장르별 특성에 맞추어 구체화할 예정이다.

모든 예술가에게 시설좋은 연습공간을 저가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연습장(예술디딤센터)도 새로 조성된다. 다양한 장르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대·중·소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공연 및 직업안내 등 정보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2014년 서울의 대학로와 지방 2곳에 우선 조성하고 전국 광역권 단위의 예술공연단체 밀집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 ■ 예술인 안전망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 지원 확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해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13년 100억원 → '14년 200억원)이 한층 진일보된다.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지원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보는 예술인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예술인 창작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진다.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불공정 관행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무용수에 대한 수술·재활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은 응급 의료구조팀이 대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비용의 일부를 영화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13년 379억원 → '14년 448억원)를 통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문학 진흥 본격화

도서관·박물관이 보유한 콘텐츠·인적자원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유명인사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인문학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도서출판 지원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하여 교양·전문도서 보급과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을 통합 확대하고 국민독서문화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 ('13) 89억원 → ('14) 142억원 → ('17) 200억원

## ■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2012년 '외래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으나, 급증하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근본적인 관광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 ■ 콘텐츠 산업 투융자 및 장르별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새롭게 조성('14년 700억원, 신규)하고 영상전문투자출자(100억원) 및 완성보증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하여 초기 투자리스크가 높은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뮤지컬·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음악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5대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장르별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하여 장르간 융합을 도모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국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국제체육 교류 활동을 통해 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가대표와 후보선수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 평창 올림픽게임 등 국내 개최가 예정된 주요 국제경기대회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국내의 도핑방지 시스템 보완 등 도핑방지활동도 강화한다.

또한, 국가경제와 지역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국제 체육대회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전적 검증절차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3년		'17년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70.0	⇒	80.0
▪ 문화산업 매출규모(조원)	97	⇒	120
▪ 외래관광객 입국(만명)	1,200	⇒	1,600
▪ 생활체육 참여율(주 2회이상, %)	37.0	⇒	60
▪ 문화 일자리 수(만명)	126	⇒	147

■ 사업 추진배경

-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하도록,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

	기존	향후
지원범위	창업 이후 지원	창업 이전의 저변 조성까지 포괄
지원대상	초기창업기업 (검증된 기존 실적 요건)	아마추어 창작자 → 창작·창업 (정부지원의 문턱 제거)
지원분야	게임 등 장르별 육성	장르간 산업간 융합·협업
지원내용	인큐베이팅 (공간 입주, 법률·회계 등 멘토링)	창작·교류·실험(Coworking Space) ⇒ 콘텐츠 특화 멘토링

■ 주요 사업내용

- (추진방향) ①열린 기회 ②협업과 융합 ③창작이 창업으로 연결

구분	대상	공간 구성
열림마당	완전개방	공개 워크숍, 특별 강연, 라운지, 카페
지음마당	회원	첨단 장비(3D 프린터, 모션 캡처, 사운드 편집실, 분장실, 연습실, 촬영·녹음 스튜디오 등)
키움마당	공개선발	회의실, 공동 작업실, 워크숍 공간, C&D Lab

-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이 가능한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융합을 실험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공개경쟁으로 선발된 창작자, 예비창업자 등에게 심화 멘토링 및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 기회를 제공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14년 서울에 제1센터, 지역권 2개소를 설립하고, 2017년까지는 수도권 2개소, 지역권 6개소 등 총 8개소를 설립 예정
-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진 콘텐츠산업의 스타트업(Start-up)을 육성하여 창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진배경

- 국민소득의 증가, 100세 시대 도래, 주5일제 등의 환경변화로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가활동 참여 욕구 증가
-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는 취약

▣ 주요 사업내용

- 기존의 문예회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지역사회 문화동호회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운영
  -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과 연계, 지역주민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 \* Hardware와 함께 자발적 참여, 자원봉사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있는 Humanware적인 성격을 동시에 적용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생활속의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 기회 확대, 문화예술·체육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도 기여
  - \* '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 지자체 조성 (서울 제외)

### ■ 사업 추진배경

-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적 사회안전망 구축
  - \* 예술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12) : 27.9%, 30.5%
  - \* 예술인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12) : 66.5%가 100만원 이하

### ■ 주요 사업내용

- (창작·직업역량 강화)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창작준비금을 지급하고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일자리와 연계시켜 생산적 복지 지원 (계속)
- (사회보험 가입 지원) 예술단체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신규)
-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신규)
- (전문 무용수 치료·재활비용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통해 큰 부상을 당한 무용수의 수술·재활비 지원 확대 (계속)

###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14년 전년대비 2배가 증가한 200억원을 예술인 복지에 투자
  - 유능한 예술인이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하여 약 18,000명 예술인 지원

■ 사업 추진배경

- 현대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독서와 인문학에 관심을 촉발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산
-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여 나가고, 소통과 나눔의 문화 확산

1997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231조원이나 같은 기간 해리포터 시리즈(조앤 K.롤링 저)가 책·영화·캐릭터로 번 돈은 308조원  
 ⇒ 한 작가의 상상력은 기간산업 하나를 웃도는 부가가치 창출

■ 주요 사업내용

- (‘길 위의 인문학’) 전국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에서 독서강연 및 탐방,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유 확산
  -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인문학 강연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겸한 지역현장 탐방
  - 참가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강사료 지원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인문학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계층 간 소통 및 청소년 및 가족 정서 치유를 통한 범사회적 공생 발전 도모 기대
- 도서관·박물관 등이 보유한 콘텐츠와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생활 속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 4. 환경 분야

### (1) 그 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환경분야 총지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4%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을 상회하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여 왔다.

〈 환경 분야 재정투자 추이 〉

	'09	'10	'11	'12	'13	연평균 증가율
* 환경 분야 (조원)	5.1	5.4	5.8	5.9	6.3	5.4

그 동안의 지속적인 재정 투자에 따라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수질개선 인프라는 크게 확충되었고, 소각·매립·재활용 시설 확충에 따른 폐기물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연환경 보호시설 등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 전국 '좋은물' 비율(%) : ('08) 58.8 → ('13) 77.2
-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 ('08) 59.8 → ('13) 64.5
-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mg/m<sup>3</sup>) : ('08) 53 → ('13) 40

그러나 수질개선에 편중된 투자 등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환경보건 등 새롭게 대두되는 수요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생물자원보전 등 효율적 자연이용, 환경보건, 주민불편 환경개선 확대 등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이슈에 대한 신규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

하·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투자를 내실화하고, 농어촌·조류발생 수계 등 취약지역 물공급 확대와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미세먼지, 지하역사 공기질 등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과 자연보전 및 복원을 통한 환경서비스 질 개선에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합리화,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와 연계한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미래환경 대비 강화

폐기물 자원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중점 투자로 자원순환사회 및 지속가능사회 전환을 유도하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중소환경기업·환경산업수출 기반육성 등 환경 R&D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창조 경제를 견인한다.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확보 등 환경보건 서비스 증진

화학사고 사전예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와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 폐광산 등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환경분야 투자계획 〉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환경분야	6,296	6,394	6,310	6,310	6,310	0.1
○ 상하수도·수질	4,162	4,279	3,916	3,838	3,774	△2.4
○ 폐기물	339	324	243	252	244	△7.9
○ 대기	292	263	516	529	540	16.6
○ 자연	426	455	462	489	531	5.7
○ 해양	216	189	195	192	194	△2.7
○ 환경일반	861	883	979	1010	1027	4.5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수질개선 기초시설 구조조정,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그 간 4대강 사업으로 집중 투자된 수질개선사업은 투자규모를 내실화 하되, 도시침수 대응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최근 수요 확대 분야는 투자비중을 강화한다. 하수관거·하수처리장 등 전통적인 환경 SOC 투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연차적 소요를 확대 지원한다.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가-지방간 역할 정립 등 하천정비 지원·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수질감시 강화 및 수질 예보제를 운영하여 조류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계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상수도 보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서민들이 마시는 지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수질조사를 추진한다.

\* 농어촌(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 ('13) 67.6 → ('17) 80.0

##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폐기물 기초시설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 소각·매립 방식보다는 자원화·에너지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님비시설로 인식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을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생활 주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리뉴얼·재활용센터, 재사용 플라자 조성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 재사용·재활용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초시설 지속 확충으로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조성한다.

권역별 재활용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 등 폐금속 재활용을 위한 맞춤형 폐자원 거래장터인 자원순환거래소를 활성화하여 폐자원의 비효율적 물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며 나아가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추진하여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조기 구현한다.

\* 폐기물매립률 : ('11) 9 → ('17) 5%

## ■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인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당대상업체 지정, 업체별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냉매의 누출 제한, 회수기준 강화 등 냉매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을 통해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 패턴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제품 보급 및 그린 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녹색제품 시장규모(조원) : ('13) 33 → ('17) 44

## ■ 녹색기술과 환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환경 R&D를 통해 신성장 산업이 육성되고, 다시 수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중점 환경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 환경 R&D 정부 투자 규모(조원) : ('13) 0.74 → ('17) 1.03

환경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를 조성하고, 환경산업 융자 및 수출기반육성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한 국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 환경산업체 해외 수출액(조원) : ('13) 6.0 → ('17) 10.0

## ■ 생태계 보전 및 생태휴식공간 확충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강화

자연마당 및 생태놀이터 등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한반도 3대 생태축(DMZ, 백두대간, 도서연안)의 훼손된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산~강~바다'를 잇는 통합적인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훼손지 복원 면적(만㎡) : ('13) 35 → ('17) 45

고유 자생생물과 야생생물 유전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확대하고, 멸종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를 건립하여 생물자원 보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BT)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한다.

\* 자생생물종 발굴 종수 누계 : ('13) 6,330 → ('17) 11,830

##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피해구제 강화 등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장외영향평가제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용품 및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저소득층, 다문화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유해물질, 환경성질환 등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 어린이용품 안전진단 제품수(개수) : ('13) 연간1,000 → ('17) 4,000

\*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비율(%) : ('13) 27.2 → ('17) 35.5

농어촌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생활 및 교통소음 저감 등 일상속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석면슬레이트 철거 동수 누계(천동) : ('13) 20.4 → ('17) 150

## ■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오염이 심각한 해역에 대한 퇴적물 정화·복원을 추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해양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 관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생물 제거와 외래 유입종 차단을 지속 추진한다.

#### (4) 지표로 본 5년후 미래상

	'13		'17
▪ 전국 좋은물 달성률(%)	77.2	⇒	83.3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4.5	⇒	75.0
▪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조원)	6.0	⇒	10.0
▪ 어린이용품 안전진단 제품(개수)	1,000	⇒	4,000
▪ 훼손지 복원 면적(만 m <sup>2</sup> )	35	⇒	45
▪ 연안정비(누적개소)	124	⇒	156

**▣ 배출권 거래제란?**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참여자별 배출량을 제한하고 참여자간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사업 개요**

- 시행시기 : 2015년
  - '14년까지는 목표관리제가 적용되고 '15년 부터는 의무시행
- 적용대상 :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
- 기준배출량 : 연간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11~'13년까지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
- 거래방법 : 거래소를 통한 거래 또는 양자간 합의에 의한 거래
  - 거래소 이용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거래
  - 양자간 합의 : 배출권거래제 참여자간 합의를 통한 거래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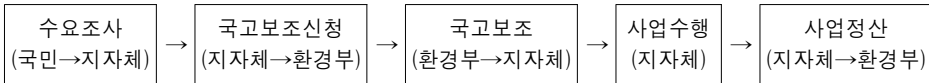
-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 중장기적인 친환경기술 개발 유도 및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 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란?

- 대부분 영세 농어가에 설치된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민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 \* 슬레이트에는 폐암 등을 일으키는 석면이 10~15% 함유됨
- '14년부터 국고 보조율을 가구당 9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상향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

▣ 사업개요

- 추진절차



- 적용대상 :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 전국 124만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88만동
- 지원금액 : 철거비용 전액(m<sup>2</sup>당 2만원)
  - 국고 가구당 144만원과 국고 지원액 이상 지방비를 확보하여 철거비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

▣ 기대효과

-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통한 거주자 및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국민 건강 보호

**▣ 저탄소차협력금제도란?**

- 이산화탄소 저(低)배출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고(高)배출 자동차 구매시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저배출 자동차로 수요이전을 촉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제도

**▣ 사업 개요**

- 시행시기 : 2015년 부터
- 적용대상 :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 치료·환자수송용, 군용, 방송·통신용 등 온실가스규제 비대상은 적용 제외
- 시행방법
  -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보조·부과
  - 자동차 판매액에 보조금-부담금을 가감하여 판매시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급 및 부담금 징수

**▣ 기대효과**

-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에너지 소비 절감
- 친환경차 보급 촉진 및 경·소형자동차로 수요 이전

## 5. R&D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최근 2008~2012년 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안정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R&D 분야에 대해 연평균 9.7%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투자 확대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간 중복·연계 조정을 강화하는 등 투자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 R&D 분야(조원)	11.1	12.3	13.7	14.9	16.0	9.7%

\* 2009년 추경은 12.7조원

그간 R&D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기초·원천연구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사업 등에 집중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초·원천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전체 R&D 투자 대비 2008년 25.6%에서 2012년 35.2%로 확대하였다. 또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도 2008년 1.4%에서 2012년 3.0%로 확대하였다.

#### ■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정부가 R&D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논문, 특허 등 성과의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성과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투자 내실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창출된 SCI 논문 수와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술료 및 사업화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성과가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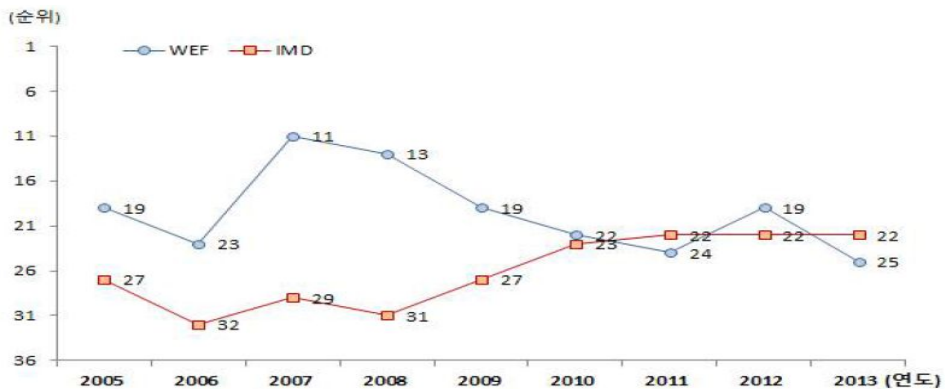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추이〉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SCI 논문 수		18,741	22,528	24,174	23,916	26,282
특허	국내출원 건수	13,691	14,134	14,905	17,969	18,983
	해외출원 건수	3,271	2,208	1,702	2,383	2,825
기술료 징수 건수		7,182	7,275	5,936	5,301	4,566
사업화 건수		7,508	6,960	8,262	9,521	7,253

SCI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5년 주기, 2007~2011년)는 3.77회로 10,000편 이상 논문발표 국가 중 30위 수준에 그쳤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논문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도 평균 5.96회로 여전히 영국(7.21회), 미국(7.17회), 독일(6.62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EF(World Economic Forum) 등 세계적인 기관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지수 또한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이다.

〈IMD와 WEF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2013~2017년 동안의 정부R&D 투자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형 R&D 생태계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2년 전체 정부 R&D투자의 35.5%였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4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창조형 R&D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비록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가의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한국형발사체개발 등 거대공공분야의 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신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의 결합, ICT와 SW, 학제 간 융합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R&D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창의력에 기반한 창업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2년 13.6%에서 2017년 1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R&D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 ■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고, 사회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선제적이고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재난·재해, 식품 위해요소,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과 고령친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R&D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난치성 질병의 극복·예방을 지원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R&D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 ■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부는 R&D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첫째, 대기업 중심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기업의 자기부담금을 상향하는 등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조세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패키지형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다.

둘째, 출연연과 대학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함께 성과중심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R&D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셋째, 장기 계속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사전기획 의무화, 적극적인 R&D 사업의 구조개편,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R&D 분야 투자계획 〉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R&D 분야	16,878	17,550	18,293	19,100	19,938	4.3%
○ 기초·환경·에너지 등	4,545	4,951	5,069	5,138	5,330	4.1%
○ 우주항공·생명 등	4,348	4,666	4,983	5,158	5,309	5.1%
○ 기계·제조 등	1,635	1,671	1,624	1,708	1,732	1.5%
○ 정보·전자 등	2,458	2,565	2,622	2,622	2,684	2.2%
○ 인력양성·장비구축 등	3,894	3,697	3,995	4,473	4,882	5.8%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기초연구 및 거대과학분야 투자 확대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40%(2012년 35.2%)로 확대 하겠다는 목표로, 창의적·안정적인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기초연구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반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한국형발사체 등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등의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사업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력단계별 연구단절 해소를 위해 중견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기초연구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에 대한 지속적 연구지원 등 기초연구의 협력 및 성과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 ICT 융복합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CT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반도체, 휴대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미디어(3DTV, 스마트TV, IPTV, UHD),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5G)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홈네트워크, 지식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Giga Korea 사업 등을 통해 ICT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SW 개발과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과 ICT 간의 융복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다.

## ■ 고령화, 재난·재해, 안전 등 국민행복기술 개발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R&D투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리한 삶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R&D투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자연재해 대비, 복합재난 대응, 특수재난, 방재실험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화 대비, 편익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기술연계를 통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후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예측·예방기술부터 사후 대응을 포함한 전주기적 투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약, 유전체, 종자 분야 등에서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추진함으로써 기초 연구의 산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림수산 분야는 종자개발을 통한 먹거리 경쟁력 확보와 유전체 관련 연구 사업에 투자의 중점을 둘 것이다. 한편, FTA,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 환경변화에 민감한 바이오 분야는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대기업→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R&D 사업 중 중소·중견 기업의 수행비중이 70% 이상인 사업을 중점 지원할 것이며,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촉진,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2017년까지 R&D예산의 18%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R&D과제는 대부분 다년도 협약으로 이루어져 매년 조정 가능한 예산 규모는 크지 않으며,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일방적 예산삭감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예산삭감 보다는 재원절감 효과가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처간·사업간 통합·이관 등 적극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투자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다. 장기간 계속된 일정규모 이상 사업과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연구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순수 연구개발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 직접투자는 지양하고 조세지원, 기술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2년		'17년
▪ 기초연구 비중 (정부R&D예산 대비)	35.2 %	⇒	40.0 %
▪ 중소기업 지원 비중 (정부 R&D예산 대비)	13.2 %	⇒	18.0 %
▪ 국가전략기술경쟁력 제고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7.8 %	⇒	85.0 %
▪ 국제특허출원 건수 (국제특허조약 기준)	11만 건	⇒	15만 건
▪ 상위 1% 논문 세계 순위	15위('06~'10)	⇒	10위('13~'17)
▪ 기술 수출액	4,032백만 \$	⇒	6,000백만 \$

■ 창조경제의 개념

-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

■ 창조경제의 비전과 전략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목표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 구현

전략	①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②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③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④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⑥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창조경제 실현에서 R&D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므로, 창조경제 실현 계획(13. 6월)에 따라 창조경제 기반확충을 위해 주요 투자분야\*별로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

\* 주요 투자분야 : ①창업생태계조성, ②벤처·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③신산업·신시장을 위한 성장동력창출, ④창의인재 양성, ⑤과학기술과 ICT혁신 강화

- 창조경제 기반과 문화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 및 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 최근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지난 5년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총지출은 연평균 0.7% 수준 증가하였다. 2008년까지는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 등을 감안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도래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정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9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무역거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부품소재, 원천기술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석유·전략광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에도 역점을 두어왔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추이〉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조원)	14.7	20.8	15.1	15.2	15.1	0.7

\* 추경포함

## ■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산업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무역 1조불 달성, 위기대응 능력제고, 주력산업의 시장점유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여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등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대기업 위주의 성장 등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서민은 성장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지속되는 반면,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은 거센 상황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EU, 미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해 개선된 우리나라의 교역 여건 및 투자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엔화약세 지속,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소비시장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商관행에 맞춘 현지화 전략 등으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량별,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핵심국가와의 FTA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지정시 종전에 단순 외국인투자 금액만 고려하던 것을 고용효과도 고려하여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를 도모하고, 현금지원 등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이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창조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선도자(First-Mover) 전략을 추진하여 선도형 新산업을 육성하고, IT와 주력산업의 융합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IT·BT·NT 등 과학기술과 산업을 접목시키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융합 新산업 발굴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미래형 자동차·해양플랜트·로봇·항공·임베디드 SW 등 IT와 주력산업을 융합하여 주력산업을 창조 산업화하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섬유·신발 등 異업종간 협력, 열악한 뿌리산업 환경 개선 등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을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여 산업 공동화 현상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우리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국가 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 중국 등 개도국에 비해서는 요소경쟁력이 낮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를 사람·기술·기업·문화가 모이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초기·기술혁신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매출채권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13) 10.0 → ('14) 14.0 → ('17) 17.0조원

또한, 창업, 기술,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펀드를 지속 확충하고 창업선도대학을 통한 창업자 발굴, 창업교육,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수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입하고 장기채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선도대학 : ('13) 402 → ('14) 508 → ('17) 667억원

##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2013년 신설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역량 강화, 공동구매 및 자발적인 협업 활성화 등 골목상권 재건을 추진하는 동시에 ICT 융합 전통시장 지원과 서비스 개선 등 전통시장의 경영혁신 지원을 강화하여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 소상공인 조직화·공동화 기반구축: ('13) 84 → ('14) 103 → ('17) 200억원

\* 시장경영혁신지원: ('13) 674 → ('14) 653 → ('17) 846억원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을 연계한 특성화시장을 '15년까지 100개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규모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누계): ('13) 71 → ('14) 94 → ('17) 160개

\*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목표: ('13) 5,000 → ('14) 7,000 → ('17) 10,000억원

## ■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복지 강화

발전설비의 적기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에너지효율 강화, 스마트 그리드 보급 등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최근의 전력난 해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취약 계층에 대한 고효율 기기 시설교체 등을 지속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에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여 안전 및 비용절감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2015년 이후부터는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양적 팽창보다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여,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융자지원, 민간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투자계획〉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5,520	15,253	14,579	13,835	13,226	△3.9
○ 산업금융지원부문	1,493	1,508	1,532	1,410	1,356	△2.4
○ 산업기술지원부문	1,118	1,205	1,282	1,260	1,290	3.6
○ 무역및투자유치부문	625	583	515	450	411	△9.9
○ 산업진흥고도화부문	7,260	7,458	7,044	6,695	6,509	△2.7
○ 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	4,545	4,033	3,722	3,510	3,125	△8.9
○ 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	478	466	484	509	535	2.9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전력부하관리사업 지출 효율화

기존에는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통해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하였으나, 향후에는 인센티브 외에 필요한 범위에서 의무절전 방식도 병행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미 2013년 하절기에 의무절전 방식을 일부 도입하여 일평균 약 250만kW의 수요감축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 지방투자 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투자보조금은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으로 운용되어 왔다. 대상 기업의 규모와 이전 지역에 따라 입지보조금은 비용의 최대 45%까지,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최대 15%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지방 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입지보조금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 취득에 대한 지원이어서 그간 여러 문제를 조정해 왔는 바, 향후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기존의 지방투자보조금 외에 고용창출 효과도 추가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원효율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효율성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간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지원성과 분석 후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통해 폐지하고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 조정

현재 신·기보,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 전체 보증잔액 대비 지역신보의 보증 점유율은 18.4%이나 출연요율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신보의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현행 0.02%)하여 정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신보 재보증: ('13) 1,100 → ('14) 548 → ('17) 500억원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용자사업 내실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용자사업은 용자대상설비에 대한 에너지절감 효과, 기술발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대상설비를 적정화하고, 대상사업 선정시 에너지절약 효과, 절감금액 등을 평가하여 평가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2014년도에 이차보전을 확대하였는바, 향후에도 정책효과와 예산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차보전을 확대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존 용자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차보전 방식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3년	'17년
▪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33	40
▪ 중장기 프로젝트 무역보험 지원(조원)	21.0	50.0
▪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비중(%)	30	50
▪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	2.4	1.5
▪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성(백만원)	102	126
▪ 전력예비율(%)	7.4	22.6

## ■ 사업 추진배경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지원을 통해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이 가능
- 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에 준하는 경제성과 편리성 제공 가능

## ■ 주요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 전국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중 의식주를 제공받는 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미공급보급시설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 \* 전국 사회복지시설 총 1,800여개 추정
- 농어촌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30세대 이상 마을(마을내 100m당 15세대 이상 밀집지역)에 대해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 \* 전국 9개도에 총 301개 마을 추정

## ■ 투자계획

-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 '13~'17년간 1,800개 시설에 총 254억원(국비 203억원) 투자 예정
  - 매년 360개소에 51억원(국비 43억원) 투자
- 농어촌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 '14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도당 1개마을 총 9개마을에 대해 총 28억원(국비 14억원) 투자 예정
  - '14년 이후 성과를 보아 투자를 확대할 계획

## ■ 기대효과

- 기존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보다는 20~30% 연료비 절감
- 기존 LPG용기에 비해 안정성이 제고되며,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등 미관 개선 효과 가능

■ 사업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우수 핵심인력 유치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주식 대신 성과보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안 마련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자와 기업주가 5년간 공동 부담 운영 후 납입금 전액과 운용수익분을 근로자에게 지원
- 조성방식 : 근로자 6 : 중소기업 3 : 정부 1

구 분	비율	주 요 내 용
근로자	6	○ 기업에서 근로자 납입금의 최소 50% 매칭 ○ 핵심인력 중요도에 따라 매칭비율 상향
중소기업	3	
정 부	0.75	○ (세제 지원) 기업 납입금의 세액 공제
	0.25	○ (시책 연계) 초기 운영비 보조, 역량강화교육

- 공제 운영수익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가 제공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5년간('14~'18년) 약 54,000명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가입 유도
- ⇒ '14년 초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0억원 재정 투입
- \* 핵심인력 공제가입 목표(누적): ('13) 7,300 → ('15) 26,500 → ('18) 54,000명
- 핵심인력의 대기업으로 이탈 방지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지원

## 7. SOC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그동안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수자원, 산업단지 등 SOC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꾸준한 SOC 투자의 결과 도로·철도 등 국가 기간망이 상당 수준 확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고속도로 연장 : ('08) 3,447 → ('12) 4,044km

\* 고속철도 연장 : ('08) 240 → ('12) 369km

특히,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위기 이전('05~'08년)의 SOC 예산은 연간 18~20조원 수준의 규모로 유지되었으나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 이후 '10~'13년 평균 24.4조원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그간의 집중적인 투자로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사회투자 확대라는 선진국형 재정투자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에는 SOC 투자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기 구축된 시설의 기능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SOC 분야 재정투자 추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조원)	20.5	25.5	25.1	24.4	23.1	3.0%

\* '08, '09 추경 예산 기준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SOC 투자 내실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추진

향후 SOC 투자 규모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되, 긴요한 국가기간망 등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구축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개선 및 보완을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의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혼잡구간 해소, 첨단 교통체계의 구축(ITS)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철도는 주요 국가 기간 노선의 적기 완공을 추진하고 철도 투자에 대한 재무성 분석 강화, 철도 설계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항만 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물류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 안전·재해예방 관리 강화

정부는 교통안전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을 위해 폭이 좁거나 급커브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도로와 병목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의 경우에도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 안전교육 실시, 항공안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항공사고의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목적댐을 적기에 완공하고, 국가하천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 지역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노후산단의 재생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산단 진입도로 연장 : ('13) 342 → ('14) 400 → ('17) 494km

또한 지역거점 항만의 시설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마리나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항만 물동량 처리목표 : ('13) 13.9 → ('17) 16.3억톤

## ■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정부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및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운영 될 수 있도록 철도, 도시철도 등 관련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의 이전 완료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세종시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 원주~강릉, 인천지하철 2호선 : ('13) 5,852 → ('14안) 9,802억원

〈SOC 분야 투자계획〉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	24,302	23,262	21,991	20,538	19,222	△5.7
○ 교통 및 물류	19,012	18,532	17,526	16,457	15,376	△5.2
▪ 도로	8,645	8,371	7,690	6,914	6,167	△8.1
▪ 철도·도시철도	6,859	6,591	6,274	5,847	5,324	△6.1
▪ 해운·항만	1,509	1,489	1,522	1,533	1,535	0.4
▪ 항공·공항	82	100	150	199	366	45.4
▪ 물류 등 기타	1,917	1,980	1,888	1,965	1,984	0.9
○ 지역개발	5,290	4,730	4,465	4,080	3,845	△7.7
▪ 수자원	2,731	2,351	2,165	2,057	1,921	△8.4
▪ 지역 및 도시	1,630	1,483	1,409	1,344	1,261	△6.2
▪ 산업단지	929	896	891	678	664	△8.1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교통혼잡구간 투자 확대 및 완공위주 투자로 효율성 제고

도로는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도시부 혼잡구간 위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도로 총연장 규모가 어느정도 축적됨에 따라 병목지점 및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 확대 등으로 교통소통 및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고, ITS 기반 도로교통 운영 체계 확대를 도로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로 투자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소요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동서축 도로(상주-영덕,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지역간 교류증진, 물류비용을 절감해 나갈 예정이다.

\* 고속도로 연장 : ('13) 4,112 → ('14) 4,162 → ('17) 4,788km

## ■ 국가 기간철도망 확대

주요 국가 기간망 복선화·전철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속철도의 주간선망인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2014년에 완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의 경우 2015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일반·광역철도를 적기에 개통하여 KTX 수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일정에 맞춰 관련 철도를 적기 개통하여 관람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물류 유통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연장 : ('13) 369 → ('14) 596 → ('15) 658km

## ■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 전략에 따라 교통인프라와 물류단지(배후도로, 배후단지 등)를 적기에 확충하고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여 국제마리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한 1종 배후단지와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전시·주거·관광시설 등을 위한 2종 배후단지 체계로 개편하여 고부가가치형 종합 물류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 공항개발절차에 따른 공항 건설 추진 및 항공안전시설 확충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제주공항 확충,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공항개발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된 항공교통센터를 현대화하는 한편, 제2항공교통센터를 구축하여 관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첨단 비행로 등 항공안전 인프라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 ■ 해외건설 수주 기반 지원 확대

2013년 해외건설시장은 2012년(80백억불) 대비 7.4% 성장한 약 86백억 불로 추정되며 중동지역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인프라 발주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이 범정부적 자본력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투자 중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자하고 해외정보네트워크 등을 지속 지원하여 국내 건설시장 침체에 대응할 계획이다.

\* 해외건설 수주 목표 : ('13) 700 → ('14) 800 → ('16) 1,000억불

## ■ 노후공단 재정비 및 기반시설 적기 지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내의 도로·공원·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산업단지 진입도로·용수공급시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지속 지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세종시로 이전되는 정부세종청사의 건립을 적기에 지원하여 청사이전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교통시설, 복합 커뮤니티센터 및 복지지원센터 등도 입주시기에 맞춰 건설하여 주민 및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3년		'17년
▪ 고속도로 연장 (km)	4,112	⇒	4,788
▪ 철도 연장 (km)	3,579	⇒	4,145
▪ 전국항만 물동량 (억톤)	13.9	⇒	16.3
▪ 산단진입도로 연장 (km)	342	⇒	494
▪ 해외건설 수주 목표 (억불)	700	⇒	1,000

▣ 사업 추진배경

- 인구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 전국적인 도시쇠퇴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한다.

\*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3.12월 시행)

▣ 주요 사업내용

-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물리적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기능의 회복을 추구한다.

-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 (경제기반형) 산단·항만·철도·하천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와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

\* (근린재생형)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상업지 등의 생활환경 개선, 골목경제 살리기,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

-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원 필요사항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패키지 지원을 결정하고 각 소관부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우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공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 지역 일자리 창출, 저평가된 도심 상권 및 주거지역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배후단지 개요

- (개념)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 등 항만시설과 업무·주거·관광·판매시설 등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 (체계) 단순 물류기능만 유지하던 항만배후단지를 종합물류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12.2.22)하여 1, 2종 체계로 개편

▣ 추진절차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고시 → 사업시행

▣ 기대효과

-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 제공
- 수출입 화물의 약 99.7%를 처리하고 있는 항만에서 배후단지의 활성화로 인해 내륙수송비를 생략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
-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는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유도하고 항만 및 물류산업의 성장 촉진
- 항만과 배후단지 간 연계를 통하여 수출입 및 환적화물의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
- 단순한 물류연계구조의 수출입화물 물류네트워크를 「항만배후단지 - 내륙단지 - 소비자」로 연결되는 체계적 유통망 구성

## 8. 농림·수산·식품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 최근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으며, 식품안전과 농수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효율화 관련 투자도 지속 확대하였다.

또한, 저수지·방조제 등 생산 관련 인프라를 지속 확충함으로써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재해대응능력도 보강하였고, 농어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복지 및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산 부문은 양식어업 육성, 수산자원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하여 수산 생태계 복원과 함께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가·지방어항을 지속 확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에 역점을 두었다.

산림 부문은 사방사업 등 재해예방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조림·숲가꾸기·임도개발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 〈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 추이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 농림·수산·식품분야(조원)	16.0	16.9	17.3	17.6	18.1	3.2%

## ■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농업 생산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재해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농지 정리 및 생산시설 현대화, 영농 규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산지 유통시설 확충, 도매 시장 시설 현대화, 표준규격 출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2년에는 농협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도록 하는 「경제사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쌀 가공산업 활성화, 고추장 등의 표준규격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액 신장에 기여하였다.

- \* 표준규격 출하율(%): ('98) 26.0 → ('11) 77.2 → ('12) 80.5
- \*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비중(%): ('01) 0.2 → ('11) 10.2
- \*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억달러): ('01) 28 → ('08) 45 → ('12) 80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인구 중 농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등 농어촌 활력 제고가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 \* 농림업 생산액(명목GDP 대비): ('05) 36.3조원(4.2%) → ('11) 43.2조원(3.5%)
- \* 농어가인구(총인구 대비): ('05) 365.5만명(7.8%) → ('10) 323.9만명(6.8%)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FTA 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와 농어촌지역의 사회·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 확보, 농수산물 수급 안정,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 복지 확대에 중점 투자한다.

## ■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우수 종자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ICT 기술을 농어업에 접목하는 등 우리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첨단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축산·원예·양식 등 시장 개방에 민감한 품목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품질개선 등 품목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 농어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근본적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전문특화단지 조성, 각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10년간 총 24.1조원을 계획대로 지원하는 한편, 2011~2020년까지 추가 2조원을 투입하는 한·EU FTA 대책 및 축산발전기금 확충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FTA 확대를 해외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

FTA 등 여건 변화를 농수산물 수출 저변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전략 지역 선정 및 전략품목 발굴, 물류전진기지 건설,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 구매자금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소비자의 고품질 신선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비료 구매 지원, 생태순환형 양식기술 확산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계획대로 조성하는 한편, 김치 등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확충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억달러) : ('12) 80 → ('13) 100 → ('17) 160

## ■ 농수산물 유통 구조 혁신 및 공급 안정시스템 구축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통계열화를 촉진하고, 사이버거래·직매장 등 다양한 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지속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정확한 농수산물관측을 기초로 하여 계약재배 및 정가·수의거래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격변동률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 \* 도매시장 정가·수의거래 활용도(%): ('13) 10.0 → ('17) 22.0
- \* 배추·무 등 5대 채소 가격변동률(%): ('13) 16.2 → ('17) 10.6

## ■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 복지 향상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기본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농어업 재해보험과 재해공제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용수 개발, 수리시설 보강, 사방사업 확대 등 농어촌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보장성 확대 등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농림수산물 분야 투자계획〉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농림·수산·식품분야	18,386	18,587	18,590	18,600	18,610	0.3
○ 농업·농촌	13,924	14,061	13,975	13,939	13,934	0.02
○ 수산·어촌	1,834	1,866	1,896	1,926	1,932	1.3
○ 임업·산촌	1,894	1,889	1,920	1,926	1,928	0.4
○ 식품업	734	771	799	809	816	2.7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FTA 취약부문 피해 보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FTA 발효 이후 국내 농수산물 공급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생산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 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의 일정부분을 직접 보전하는 등 FTA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최신시설과 농법을 보급하는 등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화를 통해 국내 축산·원예·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 투자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수출전략형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Golden Seed(황금씨앗) 프로젝트,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 등의 투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 비축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비축 대상품목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 국내산 고추·마늘에 이어 2013년에는 국내산 배추, 2014년부터는 국내산 양파와 무도 신규 비축할 계획이며, 품목별 비축 물량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 채소류 비축: ('12) 3개 품목 2.6만톤 → ('13) 5개 품목 5만톤 → ('17) 5개 품목 6만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물류센터 등을 설치하고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직매장 등 새롭고 창의적인 직거래 모델을 발굴,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공영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여 도매시장의 활력 제고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직거래 활용 비중(농산물): ('13) 4% → ('14) 5.5% → ('17) 10%  
\* 직거래 활용 비중(수산물): ('13) 1% → ('14) 1.5% → ('17) 3%

## ■ 중국 등 농수산물 수출 유망시장 개척

고품질·안전 먹거리를 중심으로 수출전략품목 개발·생산→물류→판매 등 각 단계별 수출 진흥 전략을 추진하고 특히 중국 등 우리 농수산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유망시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전진물류기지 및 현지 안테나숍 개설을 추진하고, 항공운송 물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 목표(억불) : ('13) 10 → ('14) 13 → ('17) 20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용 원료 구매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농수산물 모태펀드 내에 수출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특수목적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에서의 농수산물산업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 말산업 육성 등 농어촌 경제 활력 제고

공공 승마시설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충, 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말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한다. 특히, 말 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특구 내 말 전문병원, 인공수정 센터, 말 경매장 등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단위 말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지원: ('13) 5 → ('14) 10 → ('17) 20개소 수준

또한, 1차 산업(농축산어업)에 2차(가공·식품 등), 3차산업(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성장 활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경영 컨설팅, 공동 물류시스템, 판매촉진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육성: ('14) 250 → ('17) 1,000개소 수준

## ■ 직불금, 재해보험 등 경영 안전망 확충

농어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어업 직불금을 확대한다. 2014년부터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을 신규 지급하고,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의 어업인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의 지원단가를 2017년까지 1ha당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15년부터는 “사실상 밭”의 경우에도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가뭄 등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재해보험과 재해안전공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배, 사과, 단감 등의 품목은 특정위험 보장방식에서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보장대상 재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게 되는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재해공제 사업의 보장한도 및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13) 71 → ('17) 90개 수준

## ■ 농지연금 등 보장성 강화

고령농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보유 농지 그대로 영농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인 농지연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초기 가입비(담보 농지 가격의 2%) 폐지, 상환이자율 인하(4%→3%) 등을 추진하고, 담보농지 가치평가 방식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단일 평가 방식에서 농민들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농어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의 상향을 추진한다.

## ■ 축산업 진흥

사육 환경 개선, 우량 축종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14년에는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규 추진하여 축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사료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료 생산 품질 개선사업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4) 800 → ('17) 2,000개소 수준

## ■ 산림자원 확보 및 활용도 제고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예찰·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조림·숲가꾸기·임도사업 등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특산임산물 명품화로 임업인 소득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아숲, 생활림, 산림교육·체험시설 등을 지속 확충하여 국민행복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3		'17
▪ 농수산식품 수출액(억달러)	100	⇒	160
▪ 농촌주민 삶의 질 만족도지수	40	⇒	43
▪ 60세 미만 농가 평균소득(백만원)	45	⇒	53
▪ 농수산식품 기술수준(선진국대비, %)	75	⇒	85
▪ 연근해·양식어업 생산량(만톤)	256	⇒	297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활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농어가 소득 증가도 정체되고 있어 농어촌 활력 증진과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 6차산업화 대책을 마련하였다.(13.8월)

이번 대책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이고 상향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6차산업화 촉진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농촌의 부족한 인적역량을 귀농·귀촌 및 재능기부 등 외부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보완하고,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 네트워킹 강화,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6차산업화 주체가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6차산업화 추진계획 〉

구 분	주요내용
추진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li> <li>○ 농가의 농외소득 증가율 7.5% 달성 (현재 4.6% 수준)</li> <li>○ 고령농·여성 등을 위한 지역 일자리 매년 5천개 창출</li> </ul>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과 연계, 지역공동체 중심의 6차산업화 모델 확산</li> <li>○ 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주민참여 현장포럼] --&gt; B[마을 자원개발]                     B --&gt; C[사업 인큐베이팅]                     C --&gt; D[지역 산업화]                     E[·귀농·귀촌 ·재능기부] -.-&gt; B                     F[·교육훈련 ·컨설팅] -.-&gt; C                     G[·맞춤형지원 ·자원의 통합적 활용] -.-&gt; D                     </pre> </div>
추진전략 및 대책	<b>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6차산업화 성장단계별 육성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초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충, 6차산업화 창업보육센터 지정(중기청), 은퇴전문가의 기술·경영기법 전수 지원 등</li> <li>- (성장단계)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도입, 자본·기술부족 및 판매애로 해소에 중점(R&amp;D, 모태펀드, 농협 등에 전용 매장 설치 등)</li> </ul>
	<b>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킹 강화</b>
	6차산업화 협의체 구성, 주체간 공동사업 추진, 광역 중간지원조직 운영
	<b>6차산업화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농과계 학생에 대한 교육 확대</li> <li>- 소규모 식품·가공 시설기준 조례 제정 유도, 농가민박의 유료 조식 제공</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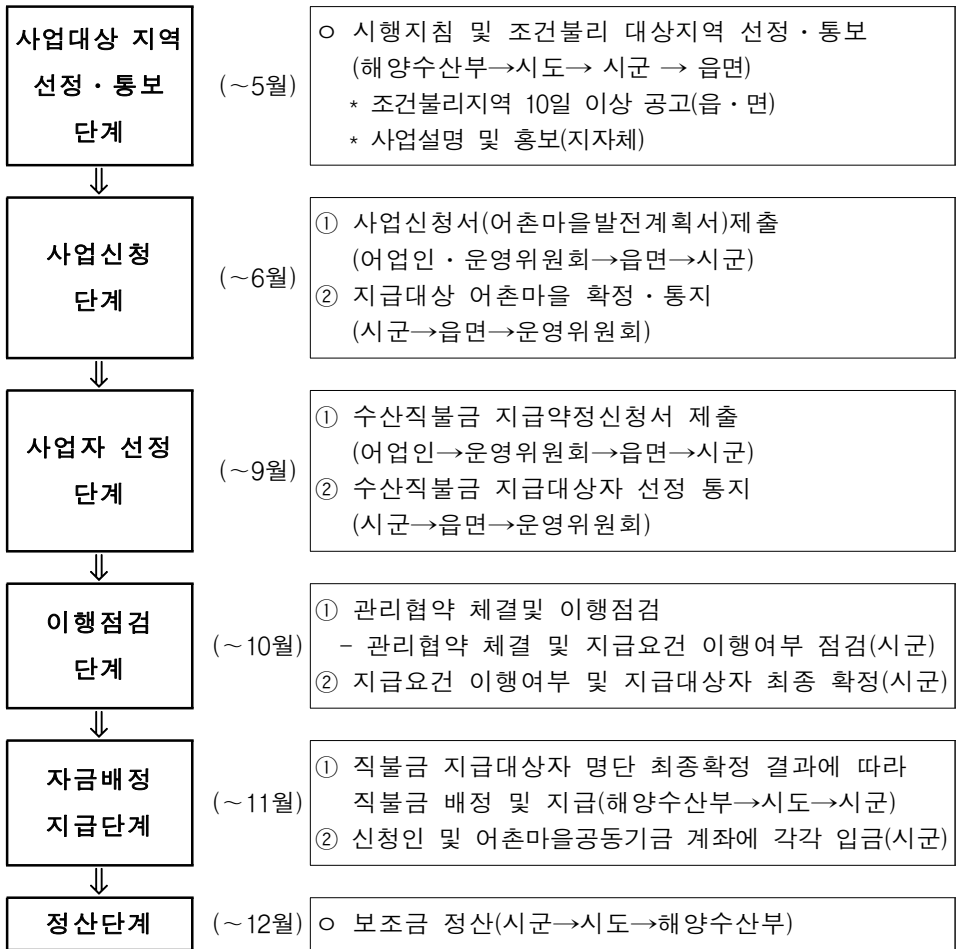
▣ **내용:**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어가당 49만원), 2년의 시범사업을 걸쳐 '14년부터 본격 시행

\* 시범사업 대상

- ('12년) 육지생활중심권 5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약 4천4백가구(18억원)
- ('13년) 육지생활중심권 3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약 7천가구(29억원)

\* '14년 본사업 대상 : 육지생활중심권 8km이상 떨어진 도서내 약 3만가구(132억원)

▣ **추진절차**



## 9. 국방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 최근 5년간 재정부용 추이 및 특징

국방비는 최근 5년간('08~'12년) 연평균 5.5% 증가하였다.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었으나, 2008년과 2012년에 14.8%를 유지하였다.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은 전력운영 5.0%, 방위력개선 6.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8년 28.8%에서 2012년 30.0%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 중에는 실전적 전투력 발휘를 위한 전투형 군대육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급식질 향상, 피복개선,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 병 복지향상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 〈국방분야 재정투자 추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 증가율
* 국방분야(일반회계 기준, 조원)	26.6	28.5	29.6	31.4	33.0	5.5%

\* '09년 추경은 29.0조원

#### ■ 재정부용에 대한 성과평가

그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정보수집, 작전수행, 지휘 통제 능력을 보강하여 왔으며,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첨단무기 체계의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투자 비중을 2007년 5.1%에서 2012년 7.0%로 지속 확대하여 왔다.

다만, 급식·피복, 군수지원, 인건비 등 국방비 내 경직성 지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국방비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핵심 구성품 등에 대한 국내개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 성과제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전투형 군대 육성을 통한 믿음직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전방지역 방호력을 보장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실제 전장과 유사한 훈련장에서 과학화된 장비를 운용하는 등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시 즉각 대응력 강화 및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 발휘를 위하여 예비군에 대한 전투 물자도 보장할 계획이다.

### ■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통한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

군 복무 중 안정적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병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식비 단가 인상 및 민간조리원 확대 등 장병 의·식·주와 관련하여 한층 개선된 생활 여건을 보장할 것이다.

상병진급자에 대한 건강검진 전면 실시, 예방백신 접종 확대 등 선진군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병영문화쉼터, 체육관, 풋살경기장 등 체육 및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한 숙소를 현대화하여 군 간부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군인자녀 관련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 ■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Kill Chain과 KAMD를 지원하는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군 협력을 통한 국방R&D 활성화,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국방 분야 투자계획〉

(십억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국방분야	33,318	34,862	36,460	37,369	38,200	3.5
○ 방위력개선	10,112	10,693	11,143	11,711	12,518	5.5
○ 전력유지	11,143	11,684	12,035	11,575	10,718	△1.0
○ 병력운영	11,860	12,283	13,056	13,875	14,746	5.6
○ 병무행정	202	203	226	208	218	1.9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병영생활여건 개선 투자 확대

신나는 병영생활을 위하여 병영문화쉼터, 실내 체력단련장 및 체육관, 풋살경기장 등 체육 및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장병들에게는 검정고시 지원, e-러닝 학습 콘텐츠 제공 등으로 자기계발 및 학습여건을 보장하여 생산적 군 복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 작전 및 경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작전 및 경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전방부대의 GP·GOP 시설 개선으로 안전성 및 작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시설 방호를 위한 울타리·초소 등 경계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정비고, 탄약고 등 전투지원시설을 현대화하여 물자저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탄약수명 보장 등에 차질 없도록 지원할 것이다.

## ■ 첨단·핵심 전력의 적정 군수지원

무기체계의 상시 기능발휘를 위한 여건을 보장하고, 군수지원 능력을 향상할 것이다. 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F-15K 전투기 등 첨단·핵심 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군수지원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 차량 등 노후장비는 교체하고 부족장비는 확보하여 가동률 향상 및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다. 특히, 임무 및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군 표준차량을 상용차량으로 연차적으로 전환·보급할 계획이다.

## ■ 개인 전투장구류 집중 확보 및 급식의 질 개선

전투효율성 향상 및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첨단화·경량화된 개인 전투장구류 및 물자를 집중 보급할 것이다. 기능성전투화, 방상내외피 등의 개인 전투장구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기본급식비 단가의 단계적 인상 및 민간조리원 확충으로 장병 급식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특히 위생적인 급식지원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후한 취사식당을 HACCP\*형 취사식당으로 개선할 것이다.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및 군 의료체계 선진화

육군 실전적 훈련장 및 해군 종합전술훈련장 등 실제 전장과 유사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여 실전적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첨단무기·장비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 및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 훈련장비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군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정확한 진단, 적시적 치료를 위한 의무시설 개선 및 의무장비를 보강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확대할 것이다.

## 민·군기술협력 촉진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창조경제 구현 및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군 공동 기술개발을 활성화 할 것이다. 첨단 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 확보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세계수준의 방산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국방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방산기업 핵심역량 강화, 방산제품 품질 안정화, 국제 방산시장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매출기준 세계 100위권에 포함되는 방산기업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선정)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3년		'17년
▪ 병 봉급(상병기준, 만원)	11.7	⇒	19.5
▪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	29.5	⇒	31.3
▪ 기능성 전투화 보급(%)	62	⇒	100
▪ 세계적 수준의 방산기업	2	⇒	10

■ 개념

- 군의 주요 장비에 대해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전문업체가 정비 및 수리부속지원을 전담 수행하여, 수행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

<예시 : F-15K PBL 사업>

F-15K의 948개 품목에 대하여 3,250억원의 계약금액으로 5년간 가동률 85%, 자재대기율 7%의 성과를 유지하도록 하고, 성과 미달성시 일정금액의 패널티를 부과

■ 추진배경

- 과학기술 발달속도 증가로 인한 부품 조기단종에 따른 대책 필요
-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장비, 지원시설, 기술인력 확보 등 효율적 군수지원 제도 필요

■ 추진경과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에 성과기반군수지원 시행근거 조항 신설 등 PBL 시행기반 구축
- 공군 KT-1 훈련기, 해군 유도탄(홍상어) 등에 시범사업 추진
- F-15K 전투기, KF-16 전투기, FA-50 공격기 등 주요무기체계에 적용 확대

■ 주요 성과

- 시범사업 추진 결과, 조달기간 단축 등의 성과향상을 달성하여 수리부속 보급지연으로 인한 장비불가동 요인 등을 개선

### ▣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선행조치

- 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각 군과 합참이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 사업에 착수한다.

### ▣ 선행연구

-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육성 효과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절차이다.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를 수행할 때 기품원·국과연·군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 사업추진 기본전략

-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전략에는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의 추진방법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시험평가 전략, 전력화평가에 관한 사항, 합동성 및 상호 운용성 확보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

### ▣ 사업타당성조사

- 사업타당성조사는 사업 필요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이다.
- 이러한 사업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 전 전문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의 첨병이다.

## 10. 외교·통일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9%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리 역할과 기여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ODA/국제기구 분담금과 같은 국격 제고를 위한 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온데 주로 기인한다. 아울러,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 외교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경제 영토 확대를 위한 한·미 FTA, 한·ASEAN FTA, 한·EU FTA 등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미·중·일 주요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자원외교 확보 차원에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의 외교관계도 확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였다. 특히, 2010년 OECD DAC에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등 한국형 ODA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ODA 지원실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 8,907억원에서 2012년 17,462억원으로 연평균 18.3%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ODA/GNI비율도 2008년 0.09%에서 2012년 0.14%로 증가하였다.

#### ■ G-20,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심국가로 부상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폭 확대, 국제기구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함에 따라 주변국가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현저히 제고되었고 외교의 선진화를 구축하는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 ■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대응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협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06.10.9, '09.5.25, '13.2.12) 천안함 폭침('10.3.26), 연평도 포격('10.11.23) 등 무력도발을 감행했으며, 금년에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 및 공단 중단을 시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단행하였고, 북한이 2013년 4월초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 및 공단 운영중단을 선언한데 대하여 개성공단에 잔류한 우리 근로자의 철수 및 피해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2007년 7,157억원(집행율 78.2%)에서 2012년 694억원(집행율 6.9%)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잠정중단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민간 대북 지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남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9.16)를 이뤄냈다.

###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추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평균증가율
* 외교·통일 분야(조원)	2.8	3.0	3.3	3.6	3.9	8.9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

북핵문제 진전,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보호, 공공외교 및 일자리 외교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전략동맹 등 주변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미래의 전략지역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개발의 신흥국에 대한 외교관계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국제 사회내 역할 확대에 따른 ODA/국제기구분담금과 같이 국격 제고를 위한 지출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 ■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700만 재외동포, 1,400만 해외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및 이로 인한 재외국민보호 외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외교의 영역이 정치·경제적 분야를 넘어 문화·공공외교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장중심의 외교강화를 위해 현지 사정에 능통한 고급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영사 콜센터 운영 활성화, 신속 대응팀 운영확대 등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외공관 리모델링 추진 등 물적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여, 외교영사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 ODA 내실화를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ODA를 지속 확대하고, 증가속도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각국의 재정지출 및 ODA 투자규모 등을 고려

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급격하게 증가해온 ODA에 대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가별 지원 전략(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원국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개발 컨설팅 확대 및 사후 평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통일기반 구축

남북관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초 하에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구체적 이행은 국민적 합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DMZ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접경지역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건립(14.8월)하여 청소년 통일체험, 남북간 인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사회 통일교육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대국민 통일의식을 공고히 하고, 미·중·일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지기반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적극 지원하여, 통일에 대비한 국민통합 기반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4,121	4,208	4,235	4,270	4,328	1.2
○ 외교부문	2,765	2,837	2,968	3,140	3,358	5.0
○ 통일부문	1,356	1,371	1,267	1,130	971	△8.0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한 외교역량 강화 추진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중 등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함께, 남북간 실질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관련국간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발전과 함께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수립 및 집행을 통해 세계 각국과 문화 외교활동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우리 문화에 동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 ■ 다자관계 협력 강화 및 지역외교 협력사업 확대

유엔 PKO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G20·APEC에서의 범세계적인 이슈 대응에 기여할 것이다. 2014년은 한-ASEAN 관계 수립 25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ASEAN 회원국 10개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한-아프리카 센터를 수립하여, 우리국민 및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체계적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아프리카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각 지역 국가 및 지역협의체와 실질협력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여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 외교 협력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다.

## ■ 재외국민 보호 및 일자리 외교 확대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시스템 최적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교육 및 문화를 재외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재외국민의 만족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및 ODA 청년인턴 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직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 우리의 발전경험, 기업 및 인력 진출과 연계한 ODA 집중지원

ODA사업은 우리의 발전경험, 기업 및 인력 진출과 연계한 ODA를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청년일자리 확대·파견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기업 진출과 연계한 대개도국 차관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들의 신흥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의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경제발전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확대 추진하고, 한국 농촌개발의 대표적 브랜드인 새마을운동 국제 확산을 통한 개도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지원 강화

제1, 2 하나원에 체육관을 신축(각각 '13.12 완공 예정, '15.12 완공 예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제고를 위한 재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자치단체·민간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 통일교육 및 이산가족교류 지원 확대

통일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향상시키고, 학습 효과가 높은 현장 체험 중심의 학교 통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상봉행사, 고향방문, 영상편지 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3년		'17년
▪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만족도	82.8	⇒	87
▪ 남북 교역액(백만불)	1,000	⇒	3,200

■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만족도

-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실시기간 및 방법 : 민간용역 업체가 9~11월 중 설문조사 실시
- 평가항목 : 영사서비스 신속도(20%), 서비스 내용 충실도(30%), 친절도(35%), 정보접근성(15%) 등으로 총 100점 만점
- 최근 5년간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평가년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점수	78.27	81.68	81.80	84.88	82.80

■ 만족도 제고 목표

- 2012년 82.8점에서 2017년도 87점 달성을 목표로 매년 1점씩 상향
- 이를 위해 재외공관별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및 영사민원 처리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 실시
- 아울러, 공관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순회 영사활동을 확대하는 등 영사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

-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고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 증대
  - 이산가족들은 매년 3~4천명씩 사망하고 있으며, 생존자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79.3% 차지(80대 이상은 46.2%)

■ 이산가족 현황

- 이산가족 규모는 조사시기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당사자 및 가족을 포함하면 대략 60~70만명으로 추정
  -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산가족은 71만명
  - 법원행정처에서 2000년 조사된 이북 출신자는 62만 6,006명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기준으로는 약 72만명 추정(2013년 8월말 기준)
- 통일부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생존자(81,8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2011년 4월~11월)
  - 66,611명(81.4%) 확인, 이중 57,362명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신청서 내용 현행화 실시

< 이산가족 연령 분포 >

구분	90세 이상	80~89세	70~79세	60~69세	59세 이상	계
인원수	6,610	29,237	22,276	8,355	6,013	72,491

■ 그간 이산가족 교류 성과

- 당국차원의 상봉 정례화 및 상봉인원 확대, 교류 방식을 다양화
  - 2000년대 들어 18차례, 연평균 2회 상봉행사 실시
  - 화상상봉(7차례), 시범적 생사 및 주소 확인(2차례), 서신교환(1차례), 영상편지교환(1차례) 실시 등 교류방식의 다양화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립('08.7월)으로 이산가족교류 기반 마련
- 개별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경비지원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 **공정한 재판환경 조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2007년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서류 중심의 재판이 아닌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을 밝히는 공판중심주의, 구술주의 원칙에 기반한 재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정중심재판·재정신청·국민참여재판·양형제도 등을, 민사재판에서는 소송구조·이혼전 상담·조정사건 지원 등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선변호인 제도, 인신보호 지원 및 소송구조 개혁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6년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2008년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도입하고, 2010년 특허소송, 2011년 민사소송 일부에 대해 전자소송을 시행하여 종이 없는 법원·등기소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원스톱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2008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이후, GPS 등을 활용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성폭력·살인·유괴범의 신체(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제도 도입 이후 4년간('08년~'12년)의 전자발찌성폭력범의 동종재범률은 2.3%에 그쳤고, 이는 제도 시행 이전 4년간

(’05년~’08년)의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8%의 1/6 수준으로써, 전자발찌 제도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 ■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7개 소 지방경찰청에 통합112신고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순찰차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신속히 출동시킬 수 있게 되는 등 범죄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 ■ 해상 위기대응 능력 강화

북한 도발에 따른 접적해역 위기관리 및 향후 PSI·대북제재조치 등 급변하는 국가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함정, 공기부양정을 신규 도입하고 무장을 보강하여 해양 경비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1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중 경찰관 사망 등 점차 흉포화하는 해상범죄 방지를 위하여 진압 및 통신장비를 확보하는 등 해상치안능력을 확충하였다. 또한 여수로 확장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에 해상종합훈련센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재해예방 예산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단기적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피해 규모와 복구비 지출수준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2007년간 연평균 1조 7,767억원의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으나 2008년~2012년간 연평균 피해액은 5,345억원으로 3.3배 감소, 복구비는 2.7배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구 분	2003~2007 평균	2008~2012 평균	비 고
예방투자	3,766	9,647	2.6배 증가
피 해 액	1조 7,767	5,345	3.3배 감소
복 구 비	2조 8,823	1조 687	2.7배 절감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투자 추이〉

	'07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조원)	10.9	11.7	12.3	12.9	13.7	14.5	5.9%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재판의 신뢰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사법부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보호실을 새로 설치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양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사·소년 재판에서 가족의 붕괴와 해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재판제도(치유적 사법제도)를 모색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형사재판절차에서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확대를 통하여 실제진실발견에 기여함과 동시에 취약 증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사재판절차 등 법원이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매뉴얼을 완비할 계획이다.

### ■ 난민지원 및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

난민법 시행에 따라 본국의 박해로부터 피난하여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난민신청 시의 언어문제 해소 및 난민인정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난민전문통역원을 운영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에 동참하여 국격에 맞는 난민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및 국내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증설하고, 범죄피해자 치료비 증액,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제도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및 과학수사 강화

가짜석유, 보조금비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아울러, 전두환 추징금 등 고액 추징금 및 벌과금 미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익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개정하고('13. 6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디지털 증거 관련 법원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수사방식과 달리 과학수사, 디지털포렌직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 디지털포렌직 수요는 200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디지털포렌직 수사지원과 회계분석·자금추적 지원 전담반을 확대·재편하고 포렌직 지원 지방거점청을 확충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 민생침해사범 단속 및 사회적 약자보호 강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구대·파출소 등 최일선 현장근무자를 증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12신고전화 후 별다른 대화 없이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급 상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응답확인시스템(ARS 콜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여성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자체 방법 시설이 미흡한 범죄취약지역 등에 설치된 이동형 방법 CCTV를 통해 지역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해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놀이터 등에 아동안전지킴이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 ■ 해상 위기관리 및 경비 역량 제고

독도·이어도 등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인접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하여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확충하고, 노후한 장비는 현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해양경계 획정에 대비하여 경비해역을 EEZ 중간선까지 확대하고, 대형함정의 전략적 기동순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경찰관의 해상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학교·특공대 등 훈련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 사전예방적 방재활동 강화

재해예방사업은 피해 복구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투자이므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통해 대상지구 1,682개소 중 1,119개소(66.5%)를 정비하였으며, 소하천은 정비대상 총연장 35,157km 중 15,704km를 정비하여 44.7%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09년부터 추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160개소 중 37개소를 정비하여 23.1%가 설치되었다.

재해복구 측면에서는 정부의 복구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재해예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투자계획〉

(십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안전 분야	15,025	15,719	16,310	16,900	17,511	3.9
○ 법원 및 헌재	1,545	1,613	1,686	1,746	1,857	4.7
○ 법무 및 검찰	2,886	2,964	2,943	2,981	3,186	2.5
○ 경찰	8,467	9,038	9,658	10,189	10,426	5.3
○ 해양경찰	1,143	1,160	1,162	1,200	1,238	2.0
○ 재난관리	984	944	861	783	804	△4.9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실시

교정행정의 기본방향을 ‘수형자를 가두어 두는 것’에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전환하여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안전한 사회’ 구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주요 교육 내용은 아버지·어머니학교, 인문학교육, 동기부여 프로그램, 종교교육, 직업훈련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인성교육 실시로 수형자 내면의 인성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외국인 기초 법질서 교육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와 제도적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나 우발적 범죄 방지를 위해 입국초기부터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를 안내하여 기초질서 위반 사례나 각종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아닌 외국인 부유층 개인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 5억이상 일정기간 외화를 예치할 경우 국내 장기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상담원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고, 예치된 외화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 ■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제 정비 및 4대악 사범 단속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개정하고('13.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2013. 6.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소위 '전두환 추징법') 개정으로 벌과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가능해지고, 추징금 면탈을 위한 제3자 명의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이 가능해진 이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여('13. 8. 22.), 공무원 뇌물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죄수익 추적·환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이다.

성폭력 등 4대악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성폭력 15.3%, 가정폭력 330.8%, 음란물 174.3%), 성폭력 범죄의 흉폭화·패륜화 경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약물치료·친권상실·신상공개 등 부가청구 및 집행 등 신제도가 신설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성폭력사범에 대한 수사 총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 전담반과 부정식품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4대악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 안전하고 공명정대한 국가적 행사 적극 지원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9. 19 ~ 10. 4, 16일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ASEAN 정상회의(12월 중) 등의 국가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경찰은 최근 보스턴 테러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경호·대테러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선거사범의 엄정 단속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11개국 3,000여명이 참석하는 한-ASEAN 정상회의 시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할 것이다.

## ■ 경찰인력 증원 및 정보공유를 통한 현장 치안대응력 강화

증원되는 경찰 인력은 국민 접점부서(파출소·지구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부서(여성·청소년계) 등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조사·재판시 관련 전문가 지원 등을 확대하여 수사·재판 제반과정에서의 아동·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등록 정보 진위 확인 및 신고등록 의무 위반자를 수사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 전파 및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스마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시스템은 크게 정보공유시스템, 생활안전 업무통합시스템, 112신고·출동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IT기기를 통한 정보공유 및 유비쿼터스적 치안활동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 첨단수사기법 및 소통위주의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의 지능화로 인해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지자체·개인이 설치하는 CCTV·블랙박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치들에 의해 촬영된 용의자는 화면이 2D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범인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3D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기 구축중인 사진자료를 3D로 변환, 신속·정확하게 범죄자 등을 검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3.0시대에 맞는 국민 참여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명 국민참여형 안심치안 서비스는, 인터넷 영역에서 목격자가 참여(커뮤니티맵)하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하여 국민들이 수집된 범죄 현장 영상 자료를 손쉽게 제보 및 처리할 수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선현장에 전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 함정·항공기 도입 및 해양안전망 구축 지원

해양주권 수호 및 체계적인 해양관리를 위해 신규함정 및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대형함정 3척, 항공기 2대)할 계획이다. 또한, 획기적인 해양사고 감축을 위하여 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연안 VTS)을 전국적으로 확대구축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하여 모든 어선에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V-Pass)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민간세력의 수색구조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선진 해양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 새로운 유형의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 강화

그간 시설투자를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드웨어 투자 중심에서 시스템 투자로의 전환과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재해관련 R&D를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최근 빈발하는 유해물질 유출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6개 산업단지 내에 '특수사고 대응단'을 신설하고, 특수차량, 개인장비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구급 분야에서는 1339의 119 통합에 따라 중앙119구급상황관리 센터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지도, 병원간 환자 이송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를 2013~2015년 동안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전국적인 구조·구급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13년		'17년
▪ 전자소송 신청건수(천건)	597	⇒	1,596
▪ 성폭력 미검률(%)	14.0	⇒	9.1
▪ 가정폭력 재범률(%)	31.2	⇒	25.7
▪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명)	4,600	⇒	6,500
▪ 재해위험지구 정비(개소)	1,119	⇒	1,479

### ■ 사업 추진배경

- 심판에 치중한 기존 가사재판 시스템의 한계로 가사사건 급증
  - \* 가사 및 소년사건 : 2005(114,983건) ⇨ 2012년(169,295건), 47.2% 증가
  - \* 이혼 증가 ⇨ 청소년 비행 증가 ⇨ 성인범 증가 ⇨ 이혼증가 악순환
- 이혼으로 발생하는 당사자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힐링(Healing) 하는 재판절차 추진

### ■ 주요 사업내용

- 이혼 및 소년범죄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재판절차 모색
  - \* 심판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음
- 이혼 소송중인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강화, 자녀의 복리증진 및 일탈 방지
- 이혼 판결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자녀들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캠프 개최
-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건전한 관계개선을 위한 양육캠프 개최 등

### ■ 기대효과

- 이혼 판결에 따른 미성년 자녀들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방황, 일탈, 범죄 등 악순환 단초 제거 및 사회적 비용발생 저감
- 자녀의 정신적 충격 최소화, 자녀의 복리 증진 및 자녀의 일탈 방지 등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 사업 추진배경

-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발 빠른 대응, 신속한 현장 전파, 수사공조 등을 위한 생활안전 통합포털 개발
- 112신고 및 스마트워크시스템에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는 치안상황 분석시스템을 구축, 통계 산출 및 생활안전 활동에 활용

### ■ 주요 사업내용

- 대국민 최 점점 부서인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연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 지역경찰, 즉심 및 통고처분, 경비업, 풍속업무, 유실물, 총포화약, 실종아동, 형사사법, 교통사고
- 112신고·출동 연계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현장출동 및 수사공조 지원
  - \* 112신고 다발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실종자 사진 조회 등 112접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연계
- 스마트워크시스템 자료\*와 사회안전정보(관내 우범지역, 관내 우범자·관찰대상자 등)를 통합·분석하여 신고 다발장소 검색, 방범심방 활동, 경력배치\*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112신고처리, 형사사건(절도·성폭력 사건 등), 교통사고, 성범죄자 자료를 분석DB로 구축하여 활용
  - \* 112신고 다발지역 등 치안상황이 실시간 반영된 경력배치·근무가능

### ■ 기대효과

- 협소한 사무공간, 개인업무용 PC 부족 등 열악한 지역경찰의 업무환경을 탈피, 활동적인 치안환경 조성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 사업 추진배경

-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인근 CCTV, 블랙박스에 의존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영상들도 많아지는 추세
  - \* 전국 설치된 CCTV는 350만여대, 블랙박스는 100만여대, 계속 증가중
- 영상에서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하더라도 별도로 신원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일선의 수요 증대

■ 주요 사업내용

- CCTV, 블랙박스 등 촬영된 영상 속 용의자의 얼굴을 3D로 인식, 특징점을 추출하여 3D 얼굴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을 통해 신원확인
- 3D 얼굴 촬영장비 도입하여 범죄수법원지 작성대상자를 상대로 DB구축, 기존 자료 62만여건의 2D사진자료는 3D화로 변환 후 활용
  - \* 향후 몽타주 사진과도 대조, 다른 범죄에 찍힌 용의자와 비교하여 수사 지원

■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2015년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시스템 개발 및 자료 변환, 촬영장비는 지속 도입 추진
- 새로운 첨단 수사기법 도입을 통한 수사신뢰도 제고, 국민들의 체감치안도 증가

### ■ 사업 추진배경

- 정부 3.0 시대의 국민 맞춤형 치안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치안안전망 확보 필요
- 現 치안문제는 경찰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민과의 정보 공유, 소통, 협력 치안을 통하여 정부 3.0 정책 뒷받침
- 범죄가 점점 지능화, 기동화 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도 첨단 IT 신기술과 결합한 융합서비스 구현 시급

### ■ 주요 사업내용

- 지역사회 및 국민들이 보유한 스마트폰,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 디바이스를 활용 지능범죄, 뺑소니사고, 교통사고 등 사건처리의 중요한 단서를 수집·제공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
  - \*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역량을 치안안전 자료 수입에 활용
- 시스템은 인터넷영역과 모바일 앱, SNS 등 3개 그룹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제보영상은 KICS(수사), 112(생안), TCS(교통) 등 시스템과 연동, 교통사고·수사·4대약 등 각종 범죄 해결
  - \* 수집된 정보를 일선 경찰에 신속하게 전파 및 증거자료로 활용

### ■ 기대효과

- 국민의 자발적인 국정참여 및 협력 강화로 국가 역량 획기적 개선
- 국민 체감치안 인프라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 ■ 최근 5년간 재정부용 추이 및 특징

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일반·지방행정분야 투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8% 증가하였다.

#### 〈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추이 〉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분야(조원)	45.7	48.7	48.7	52.4	55.1	4.8%

\* '09년 추경은 51.6조원

2009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1.9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5%)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의 안정적 재원 확충을 지원하였다.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유상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켰으며, 2013년도에도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UN회원국 중 전자정부 UN평가 2회 연속 세계 1위('10년, '12년)를 달성하였다.

## ■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8%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 중앙재원의 지방이전 현황 〉

(조원)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총지출	262.8	301.8	292.8	309.1	325.4	5.5
지방이전재원 합계	54.1	58.5	57.3	60.6	65.2	4.8
· 지방교부금	29.0	26.6	27.4	30.2	33.0	3.3
· 국고보조금	19.2	25.3	23.6	24.2	26.2	8.0
· 광특회계	5.9	6.6	6.3	6.2	6.0	0.2

지방교부세의 지속적 증가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간 불균형 완화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신장세가 좋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 ■ 취득세수 인하분 보전 등 지방재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

2013.8.28.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보육료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에 대해 정부는 개별사안별로 접근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패키지로 재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취득세수 보전 등 현안소요 해결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여건이 변동되는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입증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현안소요에 대한 재원대책과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추진한다.

### ■ 세종청사 이전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

기존에 준공된 세종청사 1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별 준공 예정(2단계 '13년말, 3단계 '14년말)인 2·3단계에 대하여 후생시설 설치·운영관리, 주요시설 민간전문 위탁 등 원활한 유지·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이 미흡한 세종시내 인프라를 감안하여 세종청사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수도권 및 주변 지역(조치원, 대전)과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 ■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3.0'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재정소요에 대한 안정적 지원

2014년 6월에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3년 처음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부재자투표 실시 관련 장비 구입, 보안프로그램 설치, 무선통신망 구축 등 선거관리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파급 효과 극대화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Green Climate Fund)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송도 정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환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의 지속적 증가추세에 따라 교육과정 확대, 협동조합 모델 발굴, 협동조합 주간행사 등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확대설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기반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투자계획 〉

(십억원, %)

구 분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 분야	55,805	58,661	60,480	64,636	68,141	5.1
○ 지방행정·재정지원	36,343	36,830	38,527	42,401	45,387	5.7
○ 재정·금융	15,509	17,826	17,704	17,869	18,213	4.1
○ 입법 및 선거관리	909	860	871	1,129	1,176	6.7
○ 일반행정 등 기타	3,044	3,145	3,377	3,236	3,365	2.5

\* '13년 본예산 기준

###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 ■ 지방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 제고

정부는 취득세수 보전, 복지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향후 10년 기준으로 연 5.0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성장세가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자주재원이 확대되고 재정분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재 5%에서 2014년에는 8%로, 2015년에는 11%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현행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충을 도모한다.

과세기반이 취약해진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성장세가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체재원 조달능력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하여 이를 향후 늘어나는 복지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준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한다.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 지역별 시설 편중이 심해 특정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 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셋째,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중앙과 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에 이양하고 사회서비스 성격의 지역밀착형 복지 보조사업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개편하여 사업추진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3.0 추진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여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민간 개방을 통해 스마트레저, 게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민원포털 기반의 통합생활민원정보 서비스 제공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지방도 구조개선 사업방식 변경 추진

위험도로 구조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총 4개의 지방도 지원 사업을 재정개혁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지방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나, 교통사고 줄이기이라는 국가 정책 추진 차원에서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재조정 측면에서 향후에는 4개 사업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방식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3		'17
▪ 지방소비세 전환율(%)	5	⇒	11
▪ 전자정부 순위(등수)	1	⇒	1

**■ GCF 유치 현황**

-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분야에서 기존 환경기금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10년 칸쿤 UN기후변화총회에서 GCF 설립에 합의하였고, '11년 더반 UN기후변화총회에서 GCF 설립을 결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설립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11년말 GCF 유치 추진을 결정하고, 더반 기후변화총회에서 GCF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여 '12.10.18~20일 송도에서 개최된 2차 이사회에서 GCF 유치국가로 결정되었고, '12.12.7일 도하 기후변화총회에서 선정 결과를 인준 받았다.

**■ GCF 유치 파급효과의 극대화**

- 우리나라에 유치된 GCF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송도 정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GCF 재원 운영과 집행에 우리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금융 분야의 역량을 확충하고, GCF 사업에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정책·기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GCF 사무국 송도 출범 후에는 사무국 측과 국내 인력 및 기업 등의 사업 참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제 5 부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 제5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 1. 세입기반 확충

#### 1) 비과세·감면 정비

##### (1) 현황

###### ■ 국세감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국세감면율은 '09년 15.8%를 기록한 이래 '14년 12.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그 감면 규모는 연간 30조원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09년부터 '12년까지 지난 4년간 재정건전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을 통해 총 3.2조원(연간 0.8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 연도별 국세수입 및 국세감면 추이 〉

구 분	'09	'10	'11	'12	'13	'14(전망)
• 국세수입(조원)	164.5	177.7	192.4	203.0	210.4	218.5
• 국세감면액(조원)	31.1	30.0	29.6	30.1	30.0	29.8
전년대비 증감률(%)	(7.9)	(△3.4)	(△1.3)	(1.7)	(△0.4)	(△0.6)
• 국세감면율*(%)	15.8	14.4	13.3	12.9	12.5	12.0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국세감면액)

\*\* '12~'14년 국세감면액에는 농수산물외제매입세액공제 등 3개 항목(약 4.3조원)이 제외되었음

###### ■ 감면혜택의 대부분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게 돌아감

국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의 대부분인 약 60%는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돌아가며, 고소득층·대기업은 약 40%의 혜택을 받게 된다.

## (2) 향후 정책방향

### ■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라면 조세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분석과 함께 일반 세출과의 중복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재설계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비과세·감면에 대해 전문기관 등을 통한 엄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고용 분야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은 확대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핵심 R&D 지원에 대한 확대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분야별 특성에 맞는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 중소기업 및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배려

비과세·감면 정비를 할 경우 현재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은 가급적 유지하도록 하고,

비과세·감면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R&D 분야, 벤처 창업 등의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 지하경제 양성화

### (1) 현황

#### ■ 지하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0년 GDP 대비 23.7%에서 '05년 19.1%, '08년 17.1%까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 비율이 '06년 각각 52.6%, 48.4% 였으나, '11년 63.9%, 53.8%로 높아졌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 과표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 (2) 향후 정책방향

#### ■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사각지대 등 숨겨진 세원에 대해 과세하여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는 과세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정보교환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

‘13년 7월 국회에서는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채납액 징수에도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FIU 금융정보를 탈세혐의 분석 등에 활용할 경우 현금·차명거래를 통한 탈세, 은닉재산 추적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당국은 고질적 조세포탈,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밀수·역외탈세 등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불법 명의대여 수입통관, 밀수·탈세사범 등 관세 탈루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세정노력과 함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해외금융계좌신고 정착 등을 통한 성실신고 분위기도 유도할 계획이다.

## ■ 성실사업자·기업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배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중소기업·서민의 세부담 증가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노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3) 금융소득 과세 강화

#### (1) 현황

#####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상 우대

그동안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득에 비해 과세상 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금융소득의 34%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되고,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과세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 (2) 향후 정책방향

#####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추진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를 고려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전환을 위해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저율 거래세 과세를 추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4)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1) 현황 및 문제점

#### ■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의 칸막이식 운영으로 종합적·체계적 운용에 한계

그간 20여 개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이 기관별로 칸막이식으로 상호 연계 없이 분산 구축·운영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한,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 각종 公簿 확인을 위해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등 국유재산 시스템을 종합적·체계적 운용하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 국유재산특례 규정의 무기한 존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양여, 6년 이상의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의 무분별한 신설과 운용을 최소화하여 국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11.4.1)하여 '13. 7월 현재 172개 법률에서 198개의 특례 규정이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특례의 목적이 달성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된 특례 규정이 무기한 존치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 행위인 양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과 협의 없이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양여 남발 우려와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특례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료 부담능력이 있는 기관에게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 ■ 국유재산 관리부담 가중 및 민간의 국유재산 이용 기회 제한

총괄청(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중 100m<sup>2</sup> 이하의 국유지가 약 24만 필지로 전체 국유지 대비 약 39%의 비중을 차지(필지수 기준)하는 등 국가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영세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 국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라 불필요한 관리비용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사유(私有)건물로 점유된 토지, 국유농지 등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하나, 매각조건 등으로 인해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의 정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 등 국유재산 수요자에 대한 국유재산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매각하거나 임대 등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한 활용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2) 향후 정책방향

### ■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에 맞게 국유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전산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재산 유관기관별로 분산 구축되어 있는 국유재산 관련 전산 시스템들을 연계하고 국유재산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하여 부처·기관 간 칸막이식 관리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먼저, 1단계 사업('12.11월 ~ '13.2월, 15.5억원)에서는 국유재산의 통합 DB 초기 자료를 구축하고 GIS 기본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업무 관리 기능은 무단점유 등 4개 부문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전체 국유재산 중 약 10%에 해당하는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자료를 정비하였다.

향후 2단계 사업('13.8월 ~ '13.12월말, 약 55억원)에서는 국유재산 통합 DB의 자동갱신을 위한 시스템을 연계하고 GIS 고급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업무 관리 기능으로 전체 부문을 개발 완료하고 전체 국유재산에 대해 자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3단계 사업('14년 중, 약 55억원)에서는 통계 분석 기능, 모바일 현장 업무 지원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4년에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국유재산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 국유재산특례 일몰제 도입

국유재산특례 운용 최소화와 유상사용 강화방침에 따라 특례는 국가 정책목적 달성상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신설을 제한하고 특례 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 일몰제를 도입하여 해당 법률에 존속기간(원칙적으로 10년)을 명시하도록 하여 존치가 불필요한 특례 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국유재산 총괄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을 지속 추진하고 사용료도 1%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현황을 기능별, 소관부처별 등으로 분류하여 특례지원 현황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 ■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동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3.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보고와 '13.6.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세부실행방안으로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희행정재산 관리강화, 국유재산 민간활용 확대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다.

소규모 토지,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국유농지, 체육시설로 점유중인 토지 등 보존 부적합 국유지의 정리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행정목적 외로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용도폐지를 통해 매각·임대 등으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국유재산 정보공개 포털을 만들어 현재 구축중인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12~'14년)을 통해 공개를 추진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 지출효율성 제고

### 1) 재정개혁의 본격적 추진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세수 실적은 부진한 반면, 복지 지출과 국정 과제 이행, 지방재정 확충 요구 등의 지출소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사업은 법적 근거와 제도적 운영체계가 공고히 확립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법령개정 등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법령개정 등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제도개선 추진**

재정개혁과제는 투자효율화,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지원체계 개선 등의 세출절감과제와 세외수입 확보 등 세입확충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절감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기존의 세출구조조정 작업과 병행 추진하되 재정개혁과제는 범부처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원체계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상시적인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추진상황의 지속적 이행·점검**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공동으로 재정개혁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제도개선과정에서 부처·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간 발생하는 이견에 대해서는 과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정절감이 필요한 다른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한다. 또한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재정개혁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력수요관리 사업군 지출 효율화 추진

- 피크 수요 분산을 위한 유인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보조금 방식에 더하여 규제방식을 병행 추진

\* 전력수급대책('13.5월)을 통해 절전규제를 하반기에도 실시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방식 개선

- 신재생설비 설치규모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경(정률→정액)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예산절감 도모

▣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 개선

- 사립학교 직원의 국가 부담 건강보험료(20%)를 사학연금 부담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인부담으로 전환

\* 사립학교 건강보험료 부담 : 개인 50%, 법인 30%, 국가 20%  
 사학연금 부담 : 개인 50%, 법인 5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 매년 확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등 재정절감

▣ 세입세출외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료 수입 세입조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내에서 운용

\*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13년 내 완료 목표)

## 2) 세출구조조정 추진

### (1) 기본 방향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면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차질 없이 공급한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부흥, 국민행복 실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한다.

####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구조조정 실시

단순 일률적인 감액을 추진하기보다는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낭비적 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사업의 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별하여, 재량지출은 생산성이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액 또는 성과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반면, 의무지출은 지출 증가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제도개선, 법 개정을 전제로 구조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 ■ 사업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출효율화 추진

사업의 기획·요구, 편성, 집행 등 생애 주 단계에 걸쳐서 상시적인 지출효율화를 추진한다.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규 재정소요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은 엄격한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한다. 집행단계에서도 연례적 집행부진 사

업 등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한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각종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구현한다.

## (2) 세부 추진방향

### ① 사전 기획·요구 단계

#### **■ 재정지원 이전에 민간·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 점검**

재정지원 이전에 민간·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으로 추진한다. 정책수혜자의 대출에 애로가 없고 민간금융기관 취급이 용이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부문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신규 시설 설치, 장비 도입시에는 타당성 심층 검토 실시**

신규 시설 설치, 장비 도입시에는 직접 투자비 이외에도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간접 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그 동안 관련 분야 투자가 지속 증가해 온 R&D, 정보화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를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 ② 편성·집행 단계

### ■ 유사·중복, 관행적·전시성 사업 정비 등 지출 효율성 제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여타 부서·기관, 자치단체, 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여 중복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유사사업은 사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행사·경기대회 행사 간소화 및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행사비를 절감하고,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도 절감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 ■ 성과 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반영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 각종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거나 지원방식을 변경한다.

또한,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한 사업을 검토하여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낭비 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되,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관리 강화·제도개선 등으로 보완한다.

### ■ 집행부진 사업 축소 조정

연례적, 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 편성한다. 또한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 예산규모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대규모 불용·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 3) 조세지출-세출예산 연계 · 정비

#### (1) 현황 및 문제점

##### ■ 조세지출-세출예산 중복지원 사업 파악 · 분석 필요

그 동안 정부 내 · 외부에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세출예산 조합에 대한 현황 파악과 중복지원 조정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조세지출-세출예산 연계·정비 등 효율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 조세지출-세출예산 이중지원 문제도 발생

대표적인 조세지출-세출예산 중복지원 사례로, 예산으로는 투자 보조금 지원을 받고 동시에 해당 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받는 조세지출-세출예산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할 경우 정부지원금(융자금, 보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는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이중지원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다.

#### (2) 향후 정책방향

##### ■ 조세지출-세출예산 중복지원 사업의 지속적 발굴 · 관리

전체 조세지출 항목을 대상으로 세출예산 사업(세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세지출-세출예산 중복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관리하여 나갈 계획이다.

조세지출-세출예산의 중복여부는 i) 정책목적, ii) 수혜대상, iii) 지원 방식의 유사성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같고 지원방식도 유사한 조세지출-세출예산 조항은 우선적으로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같지만 지원방식이 상호 보완적인 사업군에 대해서는 세제-예산간 효율적인 연계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 중복지원 사업군은 우선적으로 정비·연계강화 추진

조세지출과 예산사업 중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자와 보조방식, 행정집행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정책목적 달성에 유리한 지원방식을 검토하여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이 i) 수혜자가 세부담이 없거나 적은 취약계층인 경우, ii) 지원방식이 시범사업과 같은 일시·한시적 지원인 경우, iii) 과다소비나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조세지출 보다는 예산사업을 통한 직접지원이 정책목적 달성에 유리하다. 반면, i) 세금부담이 있는 일반계층 다수에 대한 지원인 경우, ii)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여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iii) 과다소비나 부정 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조세지출을 통한 사업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특히, 조세지출-세출예산 이중지원 문제가 지적된 사업군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융자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13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우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 조세지출-세출예산이 상호보완적인 경우, 통합성과평가 추진

예산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 과정을 지원한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사업이 상호 보완적인 정책조합을 이루는 경우에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조세지출-예산사업 조합의 효율적 작동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통합성과평가 방안을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 정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1) 추진 배경

#### ■ 민간투자사업의 위축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제도 도입 이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단기간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1994년 이후 전체 SOC 투자의 10% 수준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하여 왔고 2005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여 국립대 기숙사, 초중등학교 시설, 군관사 등 사회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4~'12년) 〉

구분	수익형(BTO)	임대형(BTL)	계
사업수 (개)	210	423	633
총투자비 (조원)	65.9	25.4	91.3

그러나, 최근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의 폐지 및 수익성 저하 등에 따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도약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더욱 그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 ■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 필요

한편, 현재 대다수 국민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및 높은 사용료 문제 등을 우려하여 기존 민자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축된 민자사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할 수 있는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2) 추진방안

### ■ 민간투자사업 발굴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으로 추진예정인 사업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후 경찰서·세무서를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등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또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수익성 낮은 사업에 혼합형(BTO+BTL) 사업 방식을 적용토록 하며, 다양한 부대·부속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민간참여 제약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선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업체 등의 공동참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 다양한 MRG 완화방안 추진

더불어, 정부는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 및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등을 통해 기존 MRG 부담을 축소하고 이에 따라 정부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초기에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는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주도 하에 도로, 철도 사업 등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3. 재정관리체계 개선

#### 1)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 (1) 추진배경 및 재원조정 기본원칙

###### ■ 취득세율 인하, 복지소요 확대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주택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2013.8.28. 취득세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감소를 전액 보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2년 이후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복지지출 부담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2005년 분권교부세 신설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자체단체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 재원조정 기본원칙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복지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에 대해 정부는 개별사안별로 접근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패키지로 재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취득세수 보전 등 현안소요 해결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여건이 변동되는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입증대 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추진한다.

## (2)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자원 조정 방안

### ■ 지방세제 개편으로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5%를 지방에 이전하고 있는 것을 2014년에는 8%로, 2015년에는 11%로 확대한다.

지방소득세를 현행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비과세·감면 등 실질적인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현행 국세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비과세·감면된 부분이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 스스로 선택하여 비과세·감면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충을 도모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과세기반이 취약해진 취득세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는 성장세가 매우 높아 취득세수 보전 등 지방재정 확충소요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향후 늘어나는 복지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 ■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예산지원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준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한다. 영유아 보육은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와 지방의 분담비율을 현행 5:5에서 6:4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예비비 등을 통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국가의 추가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 지역별 시설 편중이 심해 특정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 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분권교부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 확충이 2015년부터 나타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4년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원한다.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하여 사회서비스 성격의 지역밀착형 복지 보조사업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이러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은 관계기관·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자율성 제고**

금번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연 5.0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성장세가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으로 자주재원이 확대되고 재정분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금번 대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합리적인 재원 배분 등 세부 추진상황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다.

## 2) 국가채무관리 강화

### (1) 추진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가채무 절대규모가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수준(GDP대비)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또한,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와 관련된 차환위험<sup>9)</sup>, 시장위험<sup>10)</sup> 등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국가채무 수준을 관리하는 동시에 이러한 재무적 위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국가채무 관리 목표

####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규율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9) 차환위험(refinancing risk) : 시장여건의 악화 등으로 기존 국채를 차환하지 못하거나 차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

10) 시장위험(market risk) : 미래 이자율, 물가 등의 변동에 따라 조달비용이 증가하는 위험

## ■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조달비용 최소화

국가채무 관련 재무위험을 억제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채 발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등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국채발행 시물레이션 개선 등을 통해 차환위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추진계획

#### ■ 적자성·금융성 채무 구분관리

국가채무를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채무유형별 특성에 맞게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발행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당초 수립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향후 연간 증가규모를 적정수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2002년 수립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세계잉여금 포함)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차질없이 상환할 계획이다.

외화자산, 대출금 등의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경우 외평채 발행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며, 외화자산의 대부분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한국투자공사 위탁 등을 통해 수익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서민주거안정용 국채의 경우 대출금 및 여유자금의 만기 관리 등을 통해 채권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부동산시장 상황이 발행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권발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 ■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로 국채시장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risk factor)이 부각되면서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에 있어 월별 균등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발행물량을 조절하여 발행실패 등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발행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국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함으로써 급격한 외국자본 변동성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 국고채 차환위험 관리 강화

국고채 발행물량이 확대되면서 향후 차환물량이 증가하고 만기가 특정시점에 집중되는 등으로 차환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적 국고채 발행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만기물별 발행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여 차환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만기도래를 분산하기 위해 조기상환(buyback),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채 상환부담을 시기적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 3) 공공부문 부채 산출·관리

#### (1) 추진배경

##### ■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향후 복지지출 증가 가능성, 공기업 부채 등으로 재정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기업 부채가 재정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해소

그동안 정부는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각각을 산출·공표하여 관리해 왔다. 또한 2012년말 정부의 범위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한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공표하였다. 그러나 일반정부 포괄범위에 LH 등 공기업이 제외되어 있어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 ■ 공공부문 부채 작성에 관한 국제지침 발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간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재정통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국제기구 및 G20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 산출·공표는 G20 권고사항 중 하나이다. 그동안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국제기준은 일반정부 부문만 포괄하였으나, 2012년 6월 세계은행, OECD, IMF 등이 연합하여 '공공부문 부채 산출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을 발표하였다.

## (2) 향후 추진계획

### ■ 공공부문 부채 산출공표

정부는 '13년 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국제지침을 기준으로 해외사례, 우리나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 중이다. '13년 하반기에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확정된 후 기초 자료를 수집·검증하고, 내부거래 제거 작업 등을 거쳐 '14년에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부채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범주의 공공부문 통계를 산출할 것이다. 또한 (가칭)관리공공부채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공부채의 범주를 설정할 계획이다.

###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체계 마련

공공부문 부채 산출을 통해 공공부문 부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채무, 보증채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공공부문 재정위험을 각각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 산출을 계기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세입·세출 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괄범위를 중앙·지방·공공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공공재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 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1) 현황

#### 2012년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4조원

2012년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4조원이며, 2011년말 459.0조원 대비 34.4조원 증가하였다.

〈 공공기관 부채 현황(단위: 조원) 〉

	'11(A)	'12(B)	증감(B-A)
<b>합 계*</b>	<b>459.0</b>	493.4	<b>34.4</b>
· 공기업	329.1	353.7	24.6
· 준정부기관	120.2	129.6	9.4
· 기타공공기관*	9.7	10.2	0.4

\* 수은, 정책금융공사 등 제외

부실 저축은행 지원 등 위기관리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건설·해외자원 개발 등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확대, 보금자리 사업·세종시 건설 및 4대강 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였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상승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한전 등의 부채가 증가하였다.

#### 부채보다 자산이 큰 구조로 부채상황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더 큰 구조이고, 특히, SOC 건설 등 공기업의 중장기 투자는 先투자-後회수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부채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증가해 온 공공기관 부채 증가폭이 다소 완화되어 부채 증가율은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부채증가율(전년대비,%) : ('09) 14.3 → ('10) 15.8 → ('11) 14.7 → ('12) 5.9

## (2) 향후 정책방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12년부터 국가재정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작성대상 기관을 확대하였고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와 연계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은 공공기관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스스로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불요불급한 사업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여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낭비적·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성과를 심층분석·점검하는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5)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

### (1) 추진 배경

#### ■ 재정위기는 재정적자 이외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재정위기는 재정수지 악화 등 재정운용 측면의 원인 이외에도 금융·공기업·자치단체 등 재정 외의 분야에서의 위기가 전이(spillover)되어 나타나므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스페인·아일랜드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 가격 급락에 따라 은행 부문의 부실이 심화되었고, 대응과정에서 막대한 은행 구제금융으로 인해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일반정부 부채 '08~'12년 추이(GDP대비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8~'12년 증가폭
스페인	40.2	53.9	61.3	69.1	84.1	43.9%P
아일랜드	44.5	64.9	92.2	106.5	117.1	72.6%P

#### ■ 잠재적·우발적 재정위험 대응 강화 필요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명시적·확정적 국가채무 이외에도 잠재적·우발적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충격시 잠재적 재정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의 경우 총 169조원의 공적자금 중 49조원이 국채로 전환되어 재정건전성이 직접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외에도 GDP와 성장잠재력 하락 등까지 감안할 경우 외환위기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 (2) 향후 정책방향

### ■ 종합적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잠재적 재정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산출과 함께 기존의 조기경보시스템(EWS)에 재정위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는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등 기존의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와 함께 재정위험으로 전이가능한 잠재위험 부문을 선정(예시: 차환위험(Rollover risk), 공기업, 지방정부, 보증 등)하고, 각 분야별 점검지표를 마련하여 분석·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6) 장기재정전망 실시

### (1) 추진 배경

####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위험 증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재정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년 국가채무비율(GDP대비, %): (한국) 34.9 (미국) 102.7 (OECD 평균) 102.9

IMF도 주요국의 재정취약도(Fiscal Vulnerabilities) 평가시 우리나라에 대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해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중장기 보건, 연금지출 증가 부문에서 취약한 것으로 지적하였다.(2013.4월, Fiscal Monitor)

####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장기재정전망 부재

미국, 호주,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인구구조변화와 관련되는 연금·의료 등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EU는 27개 회원국간 비교에 중점을 두고 연금, 의료, 장기요양, 교육, 고용의 5개 분야에 대해 50년 기간의 장기재정전망보고서(Aging Report & Sustainability Report)를 3년마다 작성하고 있고, 영국은 지속가능성 분석에 중점을 두어 건강, 노인장기요양, 교육, 국가연금, 연

금수급자 급여, 공무원 연금 지출과 세수에 대해 50년간의 장기재정추계(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 개별 분야별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야별 전망의 전제가 상이하고 시행시기·공개여부 등이 개별 법령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장기 재정전망에는 한계가 있었다.

## (2) 향후 정책방향

### ■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작업 수행

정부는 해외사례와 분야별 재정재계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고령화 진전과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2012년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인구구조 변화와 연관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 초안을 기관별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1~206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작성할 예정이다.

## 필진

- **대표 집필** 예산총괄심의관 송언석
- **기획 총괄** 임기근(예산정책과장), 윤범식, 이중진(이상 예산정책과)
- **집필·편집 총괄** 장문선(예산관리과장), 이철규, 문상호, 김현석, 이성민(이상 예산관리과)
- **세부 집필(가나다순)**
  - ① **예산실** 신대원(예산총괄과), 신명석(예산정책과), 이중진(예산정책과), 문혁원(예산정책과), 권기정(기금운용계획과), 이철규(예산관리과), 김준철(복지예산과), 강경구(고용환경예산과), 박현창(교육예산과), 진민규(문화예산과), 박철건(국토교통예산과), 류승수(산업정보예산과), 김도영(농림해양예산과), 정희철(연구개발예산과), 박진호(행정예산과), 이민호(국방예산과), 권성모(법사예산과), 허진(지역예산과), 오지훈(지방재정팀)
  - ② **세제실** 조용래(조세분석과), 최상구(조세분석과)
  - ③ **경제정책국** 임흥기(종합정책과), 김성수(재정기획과), 광경준(경제분석과)
  - ④ **재정관리국** 박호은(재정관리총괄과), 이범한(재정관리총괄과), 김승현(민간투자정책과)
  - ⑤ **국고국** 김만수(국유재산정책과), 차한원(출자관리과)
  - ⑥ **공공정책국** 손창범(재무경영과)

# 2013 ~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11-10

**발행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발행일** 2013년 12월

**연락처** Tel. 044-215-7195

**인쇄처** ㈜삼일기획(Tel. 044-866-3011~4)